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7 ~ 2018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7~2018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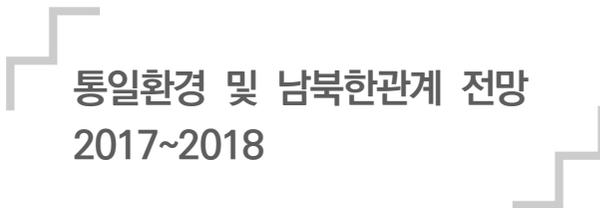
---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자	통일연구원 편
발행인	손기용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연구관리본부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02-514-5043)
인쇄처	호정씨엔피(02-2277-4718)
I S B N	978-89-8479-902-8 93340 남북 관계[南北關係], 남북 통일[南北統一]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8002637
가격	비매품

---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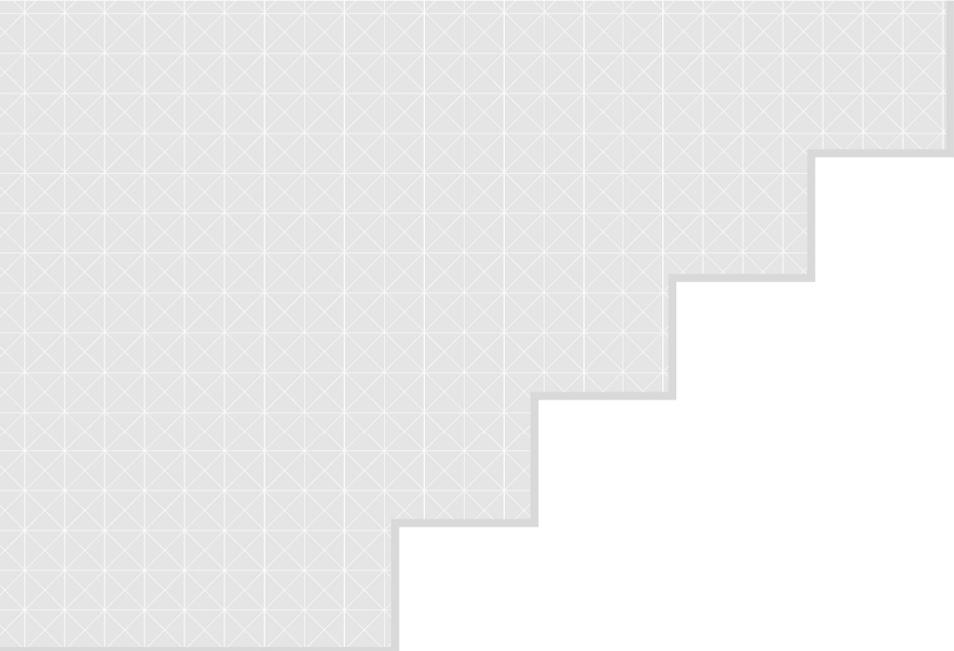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7~2018



# CONTENTS

<b>I. 동북아정세</b> .....	1
1. 동북아질서 .....	3
2. 미국 .....	9
3. 일본 .....	19
4. 중국 .....	25
5. 러시아 .....	32
<b>II. 북한정세</b> .....	39
1. 정치동향 .....	41
2. 경제동향 .....	49
3. 사회동향 .....	56
4. 북핵 및 대외동향 .....	62
5. 대남동향 .....	69
<b>III. 남북한관계</b> .....	75
1.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	77
2. 북핵 대응과 제재 .....	85
3. 통일인식 .....	89
<b>IV.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b> .....	95
1. 북한인권 .....	97
2. 대북지원 .....	103
3. 북한이탈주민 문제 .....	108
4. 3대 인도주의적 현안 .....	113
<b>부록</b> .....	117





I

동북아정세





---

## 1. 동북아질서

### 가. 2017년 정세

2017년 동북아시아정세의 주된 특징은 북핵문제가 주요국의 핵심적 관심 사안이자 최대의 지역 이슈로 부상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고조된 반면, 미중 간 경쟁 및 갈등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와 북미 간 대립 심화 그리고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추진에 주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17년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의 막바지 단계에 와있음을 밝히고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주력했다. 북한은 2017년에만 총 16회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단행하였고, 특히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타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9월에는 북한 스스로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무기 실험을 단행하였다. 11월 29일에 북한은 화성-15형 ICBM 발사실험을 진행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미국은 제재와 압박 강화로 대응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하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경제제재 강화, 외교 관계의 차단, 그리고 군사적 압박 등 전방위적으로 대북제재와 압박

---

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전략무기와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통한 군사적 압박 그리고 북미 상호 간 ‘말폭탄’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전쟁위기설까지 부상하기도 하였다. 2017년 북한의 지속적 핵·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압박 강화는 북미 간 대립 심화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는 또한 동북아의 복합적 대립구도를 촉진하였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및 추진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면서, 북한과 타 국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북중관계의 악화는 지난 11월 중국 쑹타오(宋濤) 대북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동북아 대립구도의 다른 측면은 한미일 대 중러의 갈등이다. 이 다섯 국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모두 동의하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가진다. 한미일이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찍는 반면, 중러는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해왔다. 이와 같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추진 그리고 전략무기/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와 맞물리면서 한미일 대 중러의 대립을 촉진하였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간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관계복원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북핵문제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이 2017년 동북아정세 변화의 주된 요인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미국 행정부들과 달리 패권질서의 구축과 관리에 큰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미국 자신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우선시한다. 이에

---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안보 측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과 경제 측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는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에서도 잘 드러났다.

미국 대외정책의 초점이 동아시아 질서 주도권 확보 및 관리보다 양자관계에서의 이득 확보에 맞추어짐에 따라 미중 간 지역적 경쟁과 갈등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오바마-시진핑(習近平) 시기 남중국해 문제가 미중 간 갈등의 핵심적 사안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남중국해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미중은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추진에 공조해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질서 주도권 경쟁도 미국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폐기함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지만, 일방적인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조정과 타협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에 따라 미중 양자 간 경제적 갈등도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중국 통상 압박이 유보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미관계와 미일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주목하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을 추진했지만, 동시에 동맹국 안보에 있어서 동맹국 자신의 책임과 부담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방침은 안보와 경제의 연계, 즉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및 미국 무기의 적

---

극적 판매 추진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 미국의 TPP 탈퇴와 일본의 TPP 지속 추진 입장도 한미, 미일관계의 중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러관계는 악화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러관계 개선의 전망도 제기되었지만,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러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 나. 2018년 전망

2018년 동북아정세에서도 북핵문제가 가장 핵심적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 29일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였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더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본토 타격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에 관한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하나는 북미관계의 대립성이 더욱 강화되고 북핵문제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핵군축 회담을 제안하고,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한반도·동북아정세의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미 간 협상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가능성은 대화국면 진입을 위한 사전협의 및 조치가 실행되고 협상 의제에 대한 타협이

---

이루어질 때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오는 2월과 3월의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잠정적으로 중지된다면, 북미 협상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한미는 평화올림픽을 명분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은 그것을 협상 여건의 조성으로 인정하면서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의제가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북미 간 타협이 필수적이다.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를 포함한 핵동결과 평화협정체결이 북미 쌍방 그리고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협상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평화올림픽’ 성사는 물론 남북관계 복원, 한미일 대 중리의 갈등 완화, 그리고 동북아정세의 안정화가 촉진될 수 있다.

2018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북핵문제를 제외하면) 동북아 국제관계는 지역 차원의 문제보다는 양자관계의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체화하여 아시아정책으로 발표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의 초점은 지역질서 주도권 문제보다는 미국 자신의 안보 증진 및 양자관계에서의 이익추구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중관계에서 북한 및 무역문제가 여전히 핵심 이슈가 될 것 같다.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전망은 미중이 ‘실리’를 중시하는 가운데 조정·타협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와 무역문제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지만 중국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며, 중국도 대미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

---

는 선에서 조정·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 및 무역문제가 미중 갈등 심화를 촉진하고 동북아의 불안정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 즉 중국의 대북제재 수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중 간 무역불균형의 지속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더욱 공세적인 압박을 가하고 그에 따라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동북아의 지역적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미, 미일관계는 2017년과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관계에서는 (북핵문제를 제외하면) FTA 재협상 및 동맹관계에서 책임과 부담의 분배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미일관계에서는 무역불균형 문제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구상 등 지역전략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가 이슈가 될 수 있다. 한중관계는 복원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핵문제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강화를 촉진할 때 다시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러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스캔들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개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핵문제 관련 유사한 입장을 가지며 미국에 대한 경계 인식을 공유하는 중러의 관계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협력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김상기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 2. 미국

### 가. 2017년 정세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의 대외정책 기조를 통해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정제되지 않은 레토릭(rhetoric)으로 쏟아내었던 그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마주한 위협의 외연과 이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유지해온 국제사회 리더십 형태에 있어 현실주의적 선회를 예고했다. 축소(retrenchment)적 시각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은 테러리즘과 북한 핵문제, 미국의 경제적 위상 약화와 불법이민 문제 등만이 식별되었으며, 이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바로 미국 우선주의, 즉 미국의 국익에만 온전히 집중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자유국제주의 리더십과 이를 지탱해온 자유주의적 가치, 동맹체제, 다자적 경제협력의 쇠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일부 현실화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반(反)이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69), 대중국 무역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퍼301조 발동 및 반덤핑 직권조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것은 고립주의나 역외 균형론과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것은 미국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온 대외공약(overseas commitment) 그 자체라기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이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은 축소 국면이 지속

---

되는 가운데, 지난 4월 아프가니스탄 IS 네트워크 파괴를 위한 GBU-43 투하 사례에서와 같이 미국의 우위를 확인하기 위한 대외 정책적 행동주의도 서슴지 않는 이중적 정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정확한 관찰일 것이다. 이로부터 결론지을 수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적 목표는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보다는 미국의 구조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가 과연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 나타난 대내적 국정운영의 혼선은 여전하며, 지지율은 30%대로 진입,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1월 미국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보궐선거, 12월 앨라배마 상원의원 보궐선거는 2018년 11월 열릴 미국 중간선거의 전초전이었으나, 공화당은 전패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와의 불화도 심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17년 5월에 이어 11월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 가능성 및 세계개혁안 표결 연기가 예측될 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조도 부재하다. 또한 포퓰리스트 국가주의 보수를 표방하는 스티브 배넌(Stephen Bannon)은 백악관 수석전략가 직책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간선거를 목표로 공화당 기득권층에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의회 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 레토릭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신뢰도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물론 미사일 방어 강화지원, 미군병력 증강, F-35 전투기 90대 및 군함 14억 신규건조 등 국방력 강화 및 현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이 초당적 지지를 받는 가운데 12월

---

13일 대통령이 서명하였으나, 이에 기반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상대국에게 얼마나 신뢰도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2018년 11월 중간선거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대외정책 제시, 그리고 외교안보부처 실무진들의 인선마무리에 달려있을 것이다.

북한 문제의 경우 지난 2016년 선거기간 동안에만 해도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있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상하원 외교위원회 첫 번째 청문회의 주제가 북한이 될 정도로 의회 내부에서는 북핵문제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어 있었다. 이에 2017년 4월 아시아 정책보다도 먼저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공개된 “최대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고립을 강화하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많은 국가들, 특히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관여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우선 순위로 두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총 두 차례의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S/RES/2371, 2375)이 통과되었다. 또한 미국의 대북양자제재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제재근거법에 의해 북한 및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미 금융관할권 내 자산 동결과 거래를 금지한 차원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이란, 러시아, 북한제재법(H.R.3364), 대북제재법(H.R.757),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명분으로 한 행정명령 13382호, 인권과 사이버공격을 명분으로 한 행정명령 13687호, 그리고 해외

---

노동자 송출을 명분으로 한 행정명령 13722호 등으로 단순히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에 머물러 있지 않다. 더욱이 오토 워비어(Otto Warmbier) 사망사건으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명령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김정남 살해 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강화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10월 30일 조셉 윤(Joseph Yun)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60일간 미사일발사 실험을 유예한다면 미북 간 대화의 조건이 성립된다고 언급하였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11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대화제의를 하였으나, 11월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북 간 강대강 구도는 불가피해졌다.

아시아정책의 경우, 최근 5개국 순방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시하였다. ‘재균형’과 같은 특별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지 않고 일본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의 문구를 통해 역내 미국의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동류국가들을 결집시키고자 했으며, 호혜주의(reciprocity)와 경제 및 군사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사안보에 있어서는 다자적 협력을, 경제안보에 있어서는 엄격한 호혜주의에 입각한 양자주의를 선호한다는 점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첫째, 동맹국들에 대한 부담공유(burden sharing)의 기대수준을 높이며 동맹국들이 미국이 제공하던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자유롭고 열린’ 지역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부담공유에 있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기여 수준을 높이고자 했는데, 이는 단순히 국방비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

---

과 국방자산 이전, 그리고 상호운용성 제고와 안보자산 통합 등의 수준의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경제영역에서도 공정하고 호혜적인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했고, 역내에서는 항행의 자유와 규칙 기반 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경제 협력들보다 양자적 경제관계를 선호하는데, 이는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무역과 시장접근성에 있어 미국과 경쟁할 시 세계무역기구나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를 통한 분쟁해결보다 양자적 해결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재균형정책을 통해 중동 지역에 대한 역외균형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리더십 제고의 기회를 찾으려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부상하는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준비를 강조함으로써 정책중심이 이동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경제적 부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7년 미중관계는 경쟁과 갈등, 협력의 구도가 양극적으로 심화되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공고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당의 통제의 수준이 높아져 자유화 수준이 후퇴했다고 미국은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트럼프는 중국의 대북제재와 미중 무역전쟁을 연계시키는 전략 구사를 시도하며 중국의 무역관행에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최근 보이는 회색지대분쟁 혹은 복합전의 양상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

북한 문제 역시 미중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미일관계의 경우 미일동맹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견고한 협력을 유지하며 미국을 제외한 일본 주도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PP: CPTPP)'을 지지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의 주요 행위자로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개인적인 친근감 표시와는 반대로 행정부 출범 직후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수차례 단행하였고 트럼프의 대선기간 러시아와의 공모 스캔들이 특별검사에 의해 조사받고 있어 미러관계는 냉각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대북압박을 통한 핵미사일 문제해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중국과 함께 쌍중단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미국과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많은 부분 해소되었고 핵추진 잠수함 및 정찰자산 도입을 통한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 등 많은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드 배치와 북핵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이해 공유는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나. 2018년 전망

현재 시점에서 미국은 “최대압박과 관여” 정책에 근거, 제재 및 압박 정책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속도에 비해 제재의 효과가 나타

---

나는 시점이 늦어질 경우를 고려하고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주장대로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위협에 굴복하여 북한이 원하는 수준으로 협상개시 조건을 완화시킬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아직 북한의 현재 핵·미사일 기술력이 실전배치 혹은 2차 공격능력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만약 협상개시 조건을 완화시킬 경우 미국이 유지해온 대북제재와 압박의 국제적 연대가 와해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재의 효과가 미약함을 반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오히려 데드라인을 두지 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와 압박의 기초를 장기적으로 봉쇄의 수준까지 그 공세적 수위를 높여나갈 공산이 크다.

물론 이러한 대북제재와 압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이 집결하거나 한미동맹 혹은 미일동맹 간의 합동군사 훈련이 수행되는 빈도를 높이고 유형을 다양화하여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오판을 억지하여 동북아 역내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동맹국들 간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통한 대비태세 유지,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이 오히려 북한의 체제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 인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최대압박과 관여”의 공세성을 높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내 주변국에 대한 안보 재보장(reassurance) 차원에서, 또한 “최대압박과 관여”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요 관여의 대상인 중국이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요 역내 국가들의 대북 압박 수위에 맞추어 대북 압박 수위를 조정할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또

---

한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정책이 대아시아 균형정책의 포석으로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18년에는 여전히 미북 간 대화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을지라도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및 압박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두 인물 모두 이러한 긴장고조의 대립구도 속에서 체면세워주기(face saving)의 외교적 기지를 발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에, 이와 같은 북미 간 강대강 대립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역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과거 재균형정책은 중국에 대한 균형정책과 더불어 중국과의 협력의 공간을 넓히려는 관여의 측면도 존재한 반면, 미국은 지난 아시아 순방 당시 일본과 호주, 인도와의 4각협력을 강화하는 인상을 보여 본 구상이 대중국 견제의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고, 일본 역시 대중국 봉쇄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동시에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인도·태평양 구상, 그리고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이익협력체로서 공진화시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일 간 역할분담이 역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측되나, 최근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밝혀지는 전략들 가운데에서는 대중국 공세성이 식별되고 있어, 경제와 안보영역의 서로 다른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

2018년 11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전 유권자들의 민심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장악력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선거 이후 2021년과 2022년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져 2030년까지 지속될 예정이기에 이번 선거는 민주·공화 양측에 매우 중요하다. 이번 상원 클래스 I의 33개 의석, 하원의 435석 전 의석이 중간선거를 통해 경합될 예정이며, 36개 주지사 선거도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1월 버지니아 및 뉴저지 주지사 및 앨라배마 상원의원 보궐선거 등을 통해 이미 민주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신인 정치인 부재와 더불어 2010년 중간선거의 결과로 형성된 게리맨더링(Gerry mandering) 등의 이유로 의회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면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과 힘을 통한 평화의 대외정책 노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껏 대통령의 극단적 레토릭과 불확실성을 견제해온 상하원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이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계를 은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향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또한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부 장관이 세간의 예측처럼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CIA 국장으로 교체될 경우, 대북 강경노선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북정책의 경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회 차원의 양당적 지지가 존재하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회의감이 매우 현저하기 때문에, 중간선거의 결과로 인해 지금의 대북정책인 “최대압박과 관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설사 미북 간 대화국면이 조

---

성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의 협상 조건을 낮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과적으로 미북관계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협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2018년에도 공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고조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소진될 때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최대압박과 관여”의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다. 북핵문제의 대외정책적 우선순위와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단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무역문제와 일자리 등의 경제문제 해결 등 자신의 지지기반을 향한 기존의 선거공약 구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미관계 차원에서는 향후 사드 3불원칙 천명과 한중관계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마찰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 로드맵의 시점 조율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의견 차를 끊임없이 조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균형외교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도 동북아 주변 4강과의 관계,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각의 전략과 어떻게 양립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지평 확대로 이어져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구연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 3. 일본

#### 가. 2017년 정세

2017년 일본 국내정치의 특징은 10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중의원 의석의 2/3 이상을 확보하였고, 자민당 단독으로도 과반수인 240석을 상회하는 284석을 확보하였다. 2017년 들어서도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지속하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잇따른 사학 스캔들(모리모토 학원 문제, 가케 학원 문제)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인기 상승이 맞물리면서 내각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승부수로 던진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실시, 그리고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는 2018년 10월에 열리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무난한 승리 예상과 함께 아베 정부의 장기집권을 예견하고 있다.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 문제, 헌법 개정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지만, 무엇보다 아베 총리는 ‘국난 극복’ 선거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가장 주요한 선거 쟁점으로 만들었다. 아베 총리는 북한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 없이 ‘국난 극복’이라는 점만을 강조하였지만, 이러한 전략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일본 열도 상공 통과를 경험한 일본 국민들에게 맞아떨어졌다.

한편, 일본의 대외정책은 아베 총리의 활발한 ‘정상외교’와 ‘전략외교’의 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한 해였다. 아베 총리는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지구본 외교)’를 주창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활발한

---

정상외교를 전개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부상하는 중국 대응’이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장하였고, 이 전략은 11월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2017년 미일관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친밀 외교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미일관계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록 경제면에서 연초 미국의 TPP 탈퇴가 있었지만 일본은 미일경제대화를 두 차례 개최하면서 지속적인 미국의 자유무역체제 참여를 촉구하였고, 안보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에 합의하면서 미일 간 공동 대응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2017년 중일관계는 눈에 띄는 군사, 외교적 충돌은 없었지만 여전히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지속된 반면 ‘일대일로’ 구상 참여에 대한 아베 정부의 긍정적 메시지 표시 등 경제면에서 양국 간 협력의 시도가 있었다. 중일관계는 해상 충돌 가능성과 북한 문제 해결을 둘러싼 군사, 외교적 긴장 구도와 일본의 일대일로 참여 표명이라는 경제적 협력 구도가 공존하고 있다.

2017년 러일관계에서 아베 총리는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북방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공동 경제활동 추진에 합의하는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11월 정상회담 이후 평화조약 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아베 총리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북한 문제 해결에서도 양국의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2017년 한일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내에 일본군 ‘위

---

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재검토 활동이 시작되면서 한일 갈등의 한 요인이 되었다. 아베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주장하면서 한국 측의 재협상 및 폐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일 안보협력은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실시(10월 24~25일) 등과 같이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정상 간 상대국 방문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

2017년 북일관계는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별다른 관계 진전은 없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 및 '중대한 위협'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대북제재 및 압박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중단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대화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아베 정부에게 있어 대화보다는 제재 및 압박 정책이 북일관계를 지배한 한 해였다.

## 나. 2018년 전망

2018년 일본의 국내 정세는 헌법 개정 문제가 주요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아베 총리는 평생 목표인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헌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자세와 특히 자위대 명기를 둘러싼 헌법 9조의 개정 문제는 일본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치의 다양한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개정 내용보

---

다 최소한 헌법 개정이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보이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총선거를 통해 제1야당으로 부상한 ‘입헌민주당’의 선전(55석 확보)은 향후 일본 국내정치에서 다음과 같은 예측을 갖게 한다. 첫째,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대결의 선명성이다. 총선거 이전의 제1야당 민진당은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가진 세력이 결집하였지만, ‘입헌민주당’은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중심이 된 정당이다. 향후 자민당, 희망의당(50석 확보)과 같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 맞서 입헌민주당의 정책적 대응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향후 아베 정부의 불예측성이다. 비록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나 일본 여론은 아베 총리 개인에 대해 여전히 불신이 높다. 향후 소비세 인상, 헌법 개정 논의 속 무상교육 문제 등 ‘생활정치’에 바탕을 둔 입헌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아베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현재 강력하다고 말해지는 아베 정부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2018년 미일관계는 안보 면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천 및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동맹 체제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며, 특히 미군과 자위대 합동훈련의 증가 추세는 양국의 군사 일체화 및 미일동맹 강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면에서 미일경제대화를 통해 미국은 양자 협상인 미일 FTA 협상 논의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일본은 미국이 탈퇴한 TPP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즉 경제면에서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양자 협상 구도와 일본이 추구하는 다자 협상 구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

대중관계는 2017년에 중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새롭게 강화된 가운데 증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이하여 증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2018년 한중일 정상회의 및 증일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며, 특히 일대일로 참여를 통한 증일 경제협력과 동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공연락 메커니즘’ 구축 실현 등이 양국 관계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간 의견 차이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의 불신을 일본이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가가 증일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대러관계는 푸틴 대통령의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더불어 일본의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시스템(Aegis Ashore,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대항해서 러시아가 치시마 열도(千島列島)에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북방영토를 둘러싼 러일 간 군비증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북방영토 반환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며, 따라서 러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방영토 문제 해결이 단시일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2015년 합의가 철차적,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합의 파기’나 ‘재협상’ 문제가 불거진다면 한일 간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된다면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

---

및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와는 별도로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안보협력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미군과 자위대의 군사 일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령 한일 안보협력 발전이 군사적 차원의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로 이어지는 것은 중국의 반발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의 명확한 해결 없이 추진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시도는 한국 내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북일관계는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한 일본의 강경한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북일 간 ‘대화’ 국면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납치자 가족의 고통화에 따른 납치 문제 해결에 동정적인 일본 국내 여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아베 정부도 기본적으로 ‘대화과 압력’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일대화를 모색하는 비공식적, 비밀 접촉은 계속해서 시도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북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베 정부의 표면적인 대북 강경 자세만을 보지 말고 일본의 대북 대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한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기태 기획조정실 기획부장

---

## 4. 중국

### 가. 2017년 정세

2017년은 중국이 19차 당 대회(10월 18~24일)를 통해 시진핑 집권 2기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킨 한 해로 평가된다. 중국은 19차 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의 대내외 정책방향과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지도부를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청사진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연초부터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지배체제의 안정화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고 그 일환으로 시진핑이 조장인 중앙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를 통한 경제, 법제, 사회 등 각 영역의 개혁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국제경제의 회복세와 맞물리면서 중국의 무역액은 2017년 9월까지 전년 대비 16.6% 증가하였고, GDP도 6.7%~6.9% 성장하는 등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였다.

또한 시진핑은 순정차이(孫政才) 전 충칭(重慶)시 서기를 제거하는 등 반부패 활동도 가속화하였다. 특히, 지난 5년간 시진핑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저우융강(周永康) 전公安부장,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 귀보승(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300여 명에 이르는 당, 정, 군 고위 인사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발탁함으로써 권력기반을 강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증대된 자국의 위상에 걸맞은 영향력 확대와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행보도 지속하였다. 중국은 G20(7월 5~8일), ARF(8월 6일), ASEAN+3 정상회의(11월

---

14일), APEC 정상회의(11월 10~11일) 등 기존 다자협의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주요 신흥국이 참여하는 BRICS 정상회의(9월 3~5일)와 중러가 주도하는 SCO 정상회의(6월 7~10일) 그리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5월 13~18일)을 개최하며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대안도 모색하였다.

물론, 중국은 대외관계의 핵심인 대미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4월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외교안보대화, 포괄적 경제대화, 법집행 및 사이버안보대화, 사회인문대화' 등 4개의 고위급 대화체의 설치, 운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도 그 일환이다. 게다가 미국이 TPP를 탈퇴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미중 간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미중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방중(11월 8~10일) 시에도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이견과 대립을 노정하였다. 중국은 북핵문제의 근원을 북미관계에 두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며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반면, 미국은 무력사용을 옵션에 포함시킨 채 세컨더리 보이콧을 카드로 삼아 중국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과 6차 핵실험(9월 3일)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주었고 미중 간의 마찰도 완화되었다.

하지만 북핵 고도화는 대북제재의 강화와 함께 한반도의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로 이어지면서, 북중관계는 북핵문제로, 한중관계는 사드 문제로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실제로, 북중관계는 양국관계의 레드라인을 언급할 정도로 2016년에 비해 더 악화되었으며, 의례적 수준의 교류를 제외한 실질적 협력채널이 모두 단절되었다. 19차 당 대회 직후 쑹타오 중국특사의 방북(11월 17~20일) 시 김정은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도 양국관계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한중관계의 경우는 신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로 관계회복이 지연되다가, 소위 3불(사드 추가배치 불검토, 미국 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표명(10월 31일)을 계기로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결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발전 및 다양한 차원의 교류 활성화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향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나. 2018년 전망

2018년 상반기 중국은 국내적으로 19차 당 대회에서 확정된 5년(2017~2022년)간 국정 방향과 인선 결과를 토대로 시진핑 2기 체제를 공식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즉, 5년 임기의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인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13기 전인대)의 대표들을 새로 구성하는 한편, 제19차 중국공산당 제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기 2중전회)를 개최해 13기 전인대를 준비할 것이다.

3월 초로 예정된 13기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을 비롯 국무원 총리 및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을 선출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중국은 19대 기간을 중화민족의 부흥이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신시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18년의 정책적 성과

---

를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시대의 중국을 구현할 수 있는 국내발전과 안정적 통치를 위한 정책들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정책으로는 당과 법제 방면의 개혁, 반부패 입법, 과학기술의 혁신과 민생 중심의 소비주도 성장정책,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조정, 강군몽(強軍夢) 실현을 위한 국방개혁과 군 현대화 등을 들 수 있다.

대외정책에서 중국은 상호존중, 공평정의, 상생협력의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주창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꿈 실현에 유리한 글로벌 질서형성 및 영향력 확대에 압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변화된 위상에 바탕을 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신형 국제관계와 일대일로의 추진, '친(親)·성(誠)·혜(惠)·용(容)'의 협력과 공평을 강조하는 대주변국 외교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시대의 중국은 세계 중심에 진입해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향후 책임대국의 역할 수행과 영향력 확대에도 적극적일 것이다.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규범 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중국은 미국과의 안정적·균형적 관계를 위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실리 확보에 주력할 것이나, 핵심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이 정체될 경우 양국관계의 잠재적 쟁점들인 무역불균형, 지적재산권, 남중국해, 대만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미중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관계는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상화되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미중관계의 특징은 2018년 한반도 정세에도 투영될 것이다. 물론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속에 방점을 두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한반도정책의 기초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공존공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할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면서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에 유리하도록 한반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세계) 차원의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과는 북핵문제로, 한국과는 사드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개선시킬 동기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관계 개선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주도의 질서 형성에도 긴요하기 때문에, 사드 논의와 별개로 한중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8년 한중관계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향한 정부 차원의 고위급 대화를 비롯한 다차원의 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비핵화 등 한국정부의 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회복을 통해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 및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한중관계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바, 한중관계의 회복 과정에서 사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이견 조율과 협력 수준을 조정해야 하

---

는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기초 하에서 보면, 중국의 대북(핵)정책 역시 변화의 측면보다 지속적 측면이 우세할 것이다. 책임대국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도 지속할 것이나, 단독제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동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의 대북제재 범위와 강도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북중관계의 악화 추세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북핵을 반대하나, 대미관계의 하위에서 한반도의 안정 및 영향력 유지를 위해 제재를 추진하되, 북한체제의 붕괴나 혼란을 초래하는 수준까지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일의 대중 견제에 대응하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에도 기존 북핵과 북한을 분리한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접근이나 대화에 방점을 둔 북핵 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 즉, ‘쌍궤병행’과 ‘쌍잠정중단’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미 간 중재를 통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다만, 중국의 관건적 시기와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이 중첩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통한 영향력 강화를 시도해 남북대화 및 북핵 관련 회담 재개 등의 대화국면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 주도의 질서 형성에 유리하도록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의 하위에서 운용될 개연성이 큰 바, 미중 협력과 갈등관계에 따라 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

---

향후 북한은 중국의 요구에 대한 수용을 검토하면서 관망, 접촉(대화), 재도발(핵실험)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북중관계도 변화될 여지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관망을 선택한다면, 현 구도를 유지하면서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재도발을 감행한다면 중국의 대북제재도 지속, 강화되고 이에 따라 북중관계도 악화될 것이나, 북한이 대화를 선택한다면 북중 간의 소통 채널이 복원되고 협력관계도 일정 수준 회복될 것이다.

- 전병곤 국제전략연구실장

---

## 5. 러시아

### 가. 2017년 정세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한 한반도의 긴장 정세 속에서 러시아는 기본적인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제재가 북한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재자로 나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 노력했다.

러시아는 북핵 위기의 근본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놓여 있으며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핵 억지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또 지나친 대북제재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북한에 인도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미 주도의 제재 강화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러시아의 입장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중국 샤먼에서 개최된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경우 풀을 먹더라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2001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게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거나, 북한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되며 북한 체제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북한이 주권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이를 실천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 2017년 한 해 동안 러시아의 대북 인도 물자 지원과 북·러 간 화물 수송선 운항

---

개시, 북한 인터넷망 개설 지원 등의 보도가 연이었으며, 북·러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도 잦았다.

북한 감싸기로도 보일 수 있는 러시아의 태도는 몇 가지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동북아에서 유지 혹은 확대될 수 있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이다. 둘째는 러시아의 외교 전략 자산으로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지정학적 계산이다. 셋째는 푸틴 정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원인을 종합해 볼 때, 러시아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한·미 주도의 통일이 동북아에서 가져올 전략적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2017년 들어 더욱 악화된 미·북, 중·북관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중재노력이 돋보인 측면이 있다. 러시아는 10월에만도 1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 총회에서 남·북한 의원단 대화를 제안했다가 북측에 거절당했으며, 19~2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핵 비확산 국제회의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과 조셉 윤 미 국무부 북한정책특별대표를 함께 불러 북·미 협정의 장을 제공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11월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하원의원 대표단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대표단에 속했던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세이 체파는 북한이 신뢰하는 러시아가 보증국으로 참가할 때만 한반도 위기 해결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고 주장했다.

북핵 대응에서 중·러 간 전략적 공조도 눈에 띈다. 대화를 통한 평

---

화적 해법과 강도 높은 대북제재 반대 입장을 공유하는 중·러 양국 정상은 2017년 7월 4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을 기반으로 한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동 해법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의적인 반응은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한·미 역시 중·러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2017년 들어 북한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에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송유가 어려워짐에 따라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분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3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 제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0% 정도 늘어난 수치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석유의 양은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6월 1일 북한에 100만 달러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러시아의 IPC를 비롯한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한편, 2017년은 한·러관계에서 새로운 출발이 예고된 해였다.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집권 초기부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신뢰 증진, 협력 확대에 관심을 표명해 왔으며, 이를 ‘신북방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5개 협력의 틀(한

---

-EAEU FTA 공동 실무작업반 구성,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신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립,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립)과 9개 다리(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전략을 제안했다. 러시아 측은 한국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이들 구상을 협의하기 위해 11월 27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을 방한시켰다. 2017년 1~9월 한·러 간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으며 사상 최대치의 인적교류를 기록했다.

#### 나. 2018년 전망

2018년에도 러시아는 대한반도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핵 불용 원칙 하에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미·일에 대해 3단계 해법(쌍중단과 쌍궤병행 중 쌍궤병행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1단계에서 쌍중단, 2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협상 진행, 3단계에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과 관련국 간 외교관계 정상화)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며, 중국과의 공조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북한의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노력을 견지할 것이다.

특히 북·중관계 악화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이 주목받는 상황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의 역학 구도가 북·러관계의 밀착을 더욱 추동할 개연성이 높다. 2018년 3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서방의 대러

---

제재와 미·러관계 악화로 인한 외교적 곤경에서 탈피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탈피해 예상 밖의 행보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던 푸틴 대통령의 행동 패턴이 2018년에 재현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량과 경제관계가 북·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지렛대가 그리 크지 않으며,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외교 행태로 볼 때 러시아의 설득이나 요구를 쉽사리 수용하리라고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가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한 개입 강도를 높이게 되면 중·러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러시아 외교에서 유럽과 중동, 구소련 지역 현안에 비해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 러시아가 선불리 개입 강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2018년 한반도에서 러시아가 건설적 중재자로 역할할지, 아니면 골치아픈 훼방꾼(spoiler)처럼 행동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러시아는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행위자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미·중 위주의 2차 방정식에서 러시아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우리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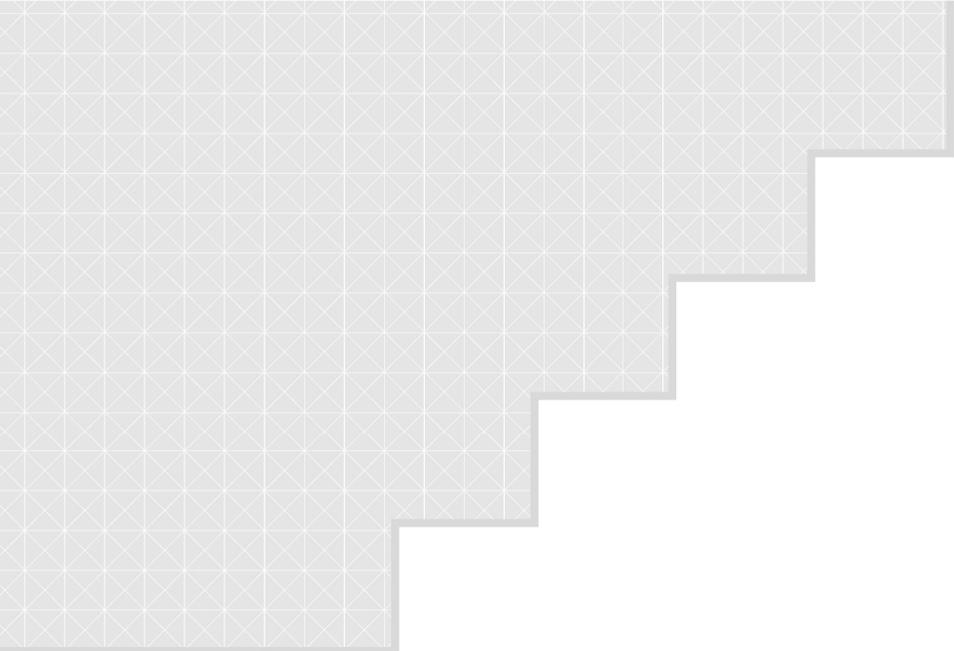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취해 나갈 전략을 파악 및 예측하고,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

소통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채널과 레벨에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북핵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양국 정상 간 신뢰 제고와 경협 확대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러시아 정·관계 및 학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한파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지식·정책 공공외교에 주력해야 한다.

- 현승수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 II

## 북한정세





---

## 1. 정치동향

### 가. 2017년 정세

2017년 북한은 7차 당 대회 시 결정한 노동당 강화발전을 통한 5대 전략과업(자강력제일주의, 과학기술발전, 인민경제발전, 문명강국건설, 정치군사적 위력 강화) 실현에 매진하였다. 대북제재 강화 환경에서 전개된 핵심 정치활동은 4가지이다. 첫째, 김정은 직할관리의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미사일 개발 및 관련자 포상·경축 사업이다. 둘째,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박봉주와 최룡해 주도의 자강력·과학기술·인민경제·대중조직 강화 사업이다. 셋째, 약 20년 만에 실시된 중앙당의 국가보위성 및 총정치국 검열이다. 넷째, 당 제7기 제2차 전원회의(10월 7일) 개최로 위기돌파 정책 마련 및 인적 진용 재구축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정치부문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자력자강 기조 하에 7차 당 대회 결정관철이다. 둘째, 각 분야에 당의 주도성 강화이다. 셋째, 대중동원·사상사업을 통한 당조직 역할 강화이다. 넷째, 간부 쇄신이다. 그리고 김정은 스스로 “인민의 참된 총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성군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 기조와 연동되어 이루어진 주요 정치 흐름은, 1월 조직지도부의 보위성 검열과정에서 김원홍 보위성 해임, 2월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피살, 4월 7차 당 대회 결정 기조에 따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 개최, 5월 화성-12형과 북극성-2형 미사일 실험 및 관련자 노고치하·경축행사,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

---

발사·대규모 성공 경축행사·관련자 노고 치하와 표창, 8월 각종 반미 선전선동 행사이다.

이어 9월 6차 핵실험 및 핵과학자·기술자 대대적 표창, 트럼프의 대북적대 발언에 대한 김정은의 직접 공격과 당·정·군 기관들의 김정은 발언 지지 집회·성명발표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중국 포함 국제사회 전반에 대북제재가 확대·강화되면서, 10~11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이후 이를 지지하는 각 기관(내각,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등)들의 후속 확대회의 또는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또한 거리상온 위싱턴 타격이 가능한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실험(11월 29일) 및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2월 평양에 이어 주요 도시별로 ‘핵무력 완성’ 기념 대규모 군민경축대회 등을 통해 엘리트와 주민들이 당중앙(김정은)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치 기조와 현실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북한정치의 4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1~2월 중 김정은은 인민경제 관련 기업이나 여명거리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며 신년사에서 언급한 애민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3월 이후 김정은은 당과 국가의 주요 공식행사 참석 외에 전략과업인 ‘핵·미사일 고도화 사업’과 관련 분야 현지도에 집중하였다.

둘째, 각 분야의 당 주도성·당조직 강화 사업은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와 박봉주가 주도하였다. 김정은 현지도 다음 위상을 가진 최룡해와 박봉주의 현지요해가 올해 활발히 이루어졌다. 박봉주의 현지 시찰 주요 대상은 국가 핵심사업인 제철, 전력, 군수공업

---

분야 연합기업소들이다. 최룡해는 체육기관이나 농근맹·청년동맹 등 근로단체 관련 기업소·건설사업을 시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제 기관 및 근로단체의 당정책 수행 상황을 점검하며 당조직 강화를 통한 자력갱생을 지시하였다.

셋째, 김정은 주재 당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개최로 핵무기 체계 완수를 위한 과업과 조직문제를 결정한다. 대북제재 확산 상황에서 당 주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할 당 고위직을 소환·해임·신임하며 당조직을 정비한다. 해당 회의는 ‘핵무력 보유 임계점’을 넘어서 암묵적일지라도 ‘국제 핵보유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김정은 정권의 정책결정 회의였다. 핵심 키워드는 자주·자력갱생 정책 및 ‘핵무기는 자주권·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이란 기조이다. 이 정책을 수행할 50~60대 엘리트 중심으로 책임자를 교체·보강하며 당조직을 정비하였다. 특히 최룡해와 김여정이 부각되었다. 김정은의 ‘당조직 및 로열패밀리 측근 강화’ 의지가 반영된 듯하다.

넷째, 당 주도 핵심 권력기관 검열 및 고위직 엘리트 쇄신이다. 먼저 1월 전후 보위성에 대한 조직지도부의 대규모 검열과 김정은의 가신이라 불린 김원홍의 보위상 해임이다. 다음으로 11월 최룡해 주도 중앙당의 군총정치국 검열로 황병서와 김원홍이 처벌되었다는 첩보이다. 약 20년 만에 실시된 중앙당의 국가보위성 및 총정치국 검열이다. 김정은의 ‘간부 쇄신’ 요구를 근거로 북한 권력기관 및 고위직 엘리트 간 쟁투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나. 2018년 전망

2018년 북한 정치는 당 주도 위기돌파 전략으로 ‘핵무력 억제점’을 넘어서 ‘국제 핵보유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총력전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제 내부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당조직 중심으로 인민(사회)과 군인(군대)의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정치 행보가 전망된다. 대중정치 차원에서선 1월 신년사 이후 소위 ‘핵무력 완성’을 이룬 김정인과 당에 대한 멸사봉공의 충성맹세를 연이어 조직하면서, 그 흐름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월 9일)까지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조직 사업 측면에선 자력갱생 기치 하에 당이 앞장선 경제기관과 근로단체 추동 사업이 이어질 것이다. 권력구조 측면에선 중앙당에서 최룡해와 김여정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와 함께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신임된 50~60대 고위직 엘리트들의 충성경쟁이 이전 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또한 김정인의 측근연합 구성에 따른 리더십 변화가 주목된다.

먼저 2018년 김정은 정권의 정치 정세는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시 결정된 대북제재 대응책 및 당조직 정비의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미 그 결정들이 실행되는 최근 북한 정세·정보와 정치특성을 기초로 2018년 북한정치를 권력구조 중심으로 전망해보자. 첫째, 중앙당과 고위직 정비의 후속 조치가 체제 전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당 중간간부와 주요 권력기관에서의 후속 세대교체 등도 전망된다. 둘째, 대북제재 확산 및 ‘핵무력 건설’ 과정의 난제와 위기에 대비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이하 당중앙군사위)의 주요 사업 비중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북한 군 위계상 최고 조

---

직인 당중앙군사위의 정보·보위·군수 사업이 강화되고 지도체계가 재정비될 수 있다. 이미 중앙당 전문부서 중 군사부가 없어지고 그 조직기능이 당중앙군사위 하부 조직으로 재편되었다는 정보도 있다.

셋째, 조직지도부의 위상·역할·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룡해의 조직지도부 부장 추정이 사실이라면, 북한 권력구조 변동과 현실진단 관련 두 가지 가능성을 구별하여 전망할 수 있다. 하나는 김정일과 구별되는 김정은 시대 조직지도부 구축 가능성이다. 이는 현 북한체제에서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가 공고화되어, 김정은이 김정일 시대와 다른 새로운 당시스템을 모색/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하나는 백두혈통과 항일빨치산 혈통 간 권력관계 변화 가능성이다. 이는 김정은 세습체제가 아직 공고화되지 않았고 로열 패밀리 세력이 약해져, 북한 지배연합의 한 축인 만주항일빨치산 후세들이 통치 전방에 나설 만큼 성장했다는 추론에 기초한다. 한편 김정일 시대 완성된 조직지도부 위상과 역할에 기초할 때, 전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의 실질 후임자는 2015년 이후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고 있는 조용원(現 조직지도부 부부장)일 것이다. 기간 이력과 행보로 볼 때 조용원은 최룡해와는 상반되는 엘리트 특성을 보인다. 향후 조용원은 조직지도부에서 김정은과 최룡해 간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하거나, 사업과정에서 최룡해를 은밀히 견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당의 노선과 전략 실현을 위한 내각과 경제 지도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시 김정은은 ‘내각과 모든 경제지도 기관들이 혁명적 대응 전력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지휘를 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연동되어 상당수 행정경제 및 군

---

수공업 분야 엘리트들이 당 고위직에 신임되었다. 이들은 내각 및 방대한 공장·기업소를 지도하며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군수공업부와 2경제위원회에서, 당의 자력갱생 노선과 핵무력 고도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인민의 고난을 강제할 것이다.

다섯째, 해외 통치자금 유입에 난관이 따르면서 북한 내부 기관·인민을 대상으로 한 충성자금 헌납 요구가 강화될 수 있다. 2018년 대북제재 강화·확산으로 김정은의 통치자금 유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치자금 마련·관리부서인 중앙당 39호실·재정경리부 등은 당원 뿐 아니라 각 기관·단체·개인들을 대상으로 충성자금 모금운동을 확대할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담 증대로 대규모의 충성자금을 헌납해야 하는 특수기관들 간의 이권 경쟁과 갈등이 증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자력갱생을 실행해야 할 인민들의 출혈 노동이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선물정치’, ‘배급 보조’ 등 김정은의 혁명자금(통치자금 재분배) 지원이 어려워지면 김정은 정권의 통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을 군인과 군부대의 동요를 주목해야 한다.

여섯째, 기층 당조직인 초급당과 당세포 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과 지역 간의 마찰 및 갈등이 증대할 수 있다. 기층 당조직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지역(도·시·군)당위원회는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민생불안·민심변화·주민동요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중앙당이 요구한 지역별 ‘자력갱생’을 이루기 위해, 인민 고난을 강제하는 억압과 통제 정책을 삶의 현장에서 인민들과 부딪치며 수행해야 한다. 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중앙의 당자금·충성자금 헌납 및 생산·노력동원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이미 북한체제에서 평양과 지역 간 생활격차 및

---

김정은의 지역별 지원 격차가 상당히 커진 상태이다. 김정은 정권이 주도한 평양 발전 지원과 특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상황에서 중앙당의 요구나 지시를 완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상급기관과의 마찰이나 갈등이 증대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지시’ 사이에서 자체 자원(資源) 토대가 약한 중간급 지역 당위원회의 고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김정은의 리더십 전망이다. 2012~2017년 현재까지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 지지도가 낮은 수준이나 미세한 상승 추세를 보인다. 그 원인은 첫째, 핵·미사일 기술 진전 및 관련 선전선동 사업 효과, 둘째, 물가안정과 시장활성화 효과, 셋째, 간부쇄신을 기치로 한 고위직 엘리트 숙청 효과 때문이다. 한편 김정은 리더십 관련 주목할 사안은 지난 6년간 김정은의 공개 활동 추이 및 특징이다.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후 왕성한 공개 활동을 하였는데 점차 공개 활동 횟수 및 수행인원 규모가 점차 감소하였다. 2017년 역시 김정은 공개 활동이 2016년보다 축소되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이 공식 제도를 중심으로 한 활동보다는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제도’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정책을 구상 또는 결정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공개 활동 횟수의 축소 추이는 김정은이 점차 비공개 측근정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수행인원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김정은 중심의 지배연합 규모가 점차 소수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독재정권에서 이러한 양상은 상호 이질적인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신생 독재정권이 자신의 측근그룹을 구성하여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중의 불만 증대

---

와 함께 측근그룹에서 배제된 엘리트들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흐름 형성이다. 첫 번째 경우인 비공식 측근연합 구축은 독재자의 정세인식 협소화 및 불안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소수의 측근에게 의존하기에 독재자의 정세인식은 점차 협소화된다. 또한 심리적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지시는 제대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은 제약되기 때문이다. 즉, 체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모르고 있거나, 누군가 이를 막고 있다는 의심이 증대하면서 불안감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경우 대중과 엘리트의 체제 충성 명분이 약해지며 나타나는 정치적 무기력증 및 새로운 대안 모색이다. 이는 측근그룹의 소수화 및 독재자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도한 동원과 억압에 비해 삶의 개선 전망이 점차 낮아지면서 대중들의 불만은 증대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권력과 자원에 대한 접근력이 높았던 정권엘리트들 중에 측근그룹에서 배제되는 인물군이 형성된다. 그리고 비공식 네트워크 역할이 증대하면서 공식 엘리트들의 충성 명분이 점차 약화된다. 경제적 보상이나 수혜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증대한다. 이러한 상황이 진전되면서 측근그룹에서 제외된 엘리트들은 대중의 불만과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대안 또는 출구를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가 2018년 북한 정치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박영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

## 2. 경제동향

### 가. 2017년 정세

한국은행은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을 3.9%로 추정하였다. 이는 정체 내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리라는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17년 북한경제는 제로 성장 또는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실적이 전년에 비해 부진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가장 주된 근거는 대북제재 조치가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북한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의해 2017년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수출이 2015년의 38% 수준으로 제한되었고, 그 영향으로 북한의 대중수출은 3/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하였다.

4/4분기에 들어와서는 이보다 더 강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력 수출품 대부분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중 하나인 해외노동자의 추가 송출도 금지되었다. 게다가 원유 및 정유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가 처음으로 취해지기도 했다. 그 결과 북한의 10월 대중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7년 북한의 대중수출 감소폭은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북제재로 북한의 수출은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이것이

---

북한 대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이 위축된 반면, 10월까지 대중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재국면에 진입한 이후에도 북한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여러 필수 물자를 계속 수입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대중수입이 8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제재의 영향이 수입 측면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제재가 북한 대내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경제 실적은 전년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석탄 등 2016년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부문의 성과에 대한 북한 국영매체의 보도가 감소했으며, 새로 추진된 대규모 건설사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내경제 실적이 부진한 데에는 수출 제한에 따른 생산 감소와 함께 2016년 300일 가까이 전개되었던 속도전의 후유증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농사 작황 역시 전년에 비해 다소 부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 기구들은 4~6월 모내기철 심했던 가뭄으로 인해 북한의 농사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수력발전 의존도가 높으므로 가뭄은 농사 작황 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악화되고 대북제재가 심화되는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물가와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류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쌀 가격과 환율 등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 나. 2018년 전망

2018년 북한경제 전망은 어둡다.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 당국은 국산화를 강조하는 등 버티기 전략을 펴나갈 것으로 보이나, 제재에 따른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로도 이어지면서 경제적 피해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북한의 수출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하반기에 연이어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및 2397호에 의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철강, 농수산물, 섬유제품 등에 대해 취해진 수출금지 조치의 효과가 2017년 4/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북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을 대체할 만한 수출상품이 마땅찮다는 점에서, 2018년에 수출의 급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년과 다른 부분은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대내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술했듯이, 2017년에는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 결과 10월까지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 4.2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2.8억 달러로 3배가량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로 보아 2017년 북한의 대중무역적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무역적자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018년에는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2년 내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환을 결정함에 따

---

라 향후 해외노동자 감소에 따른 외화유입 감소 역시 상품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2397호는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각종 수송기계, 각종 금속제품의 대북한 수출을 금지했으며, 2375호에서 도입한 대북한 정제유 공급량 연간 쿼터를 크게 감축하였다. 이에 따른 상품수입 감소는 북한 대내경제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며, 특히 각종 산업용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줄어들어 따라 북한의 산업생산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제유 공급 제한에 따른 운송능력 위축은 산업부문만이 아니라 유통업, 운수업, 건설업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대내외 경제 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경제운영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18년은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물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도 2018년에는 경제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급격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2016년부터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국산화를 강조하고 대외의존성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제재 환경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펴왔는데, 강조점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2018년에도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다.

2018년에 북한 당국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국산화일 가능

---

성이 높다. 석탄가스화 공법을 비롯한 기술 개발, 경공업 제품의 국산화 확대 등 국산화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에 주력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홍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국산화 혹은 수입 대체 전략을 추진하다 실패한 바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국산화 정책이 일부 분야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장부문의 경우, 북한 당국의 시장 목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거래 규모는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김정은 정권은 제재에 따른 경제 악화 및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을 목인하는 기조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로 이어져 상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시장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상품수입 감소 및 유류 공급 제한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생산·유통비용 상승에 따라 시장물가가 상승하고 시장소득이 줄어들면서 주민생활이 크게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을 활용하는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정이 부족한 데다 제재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 경제 운영에서 민간자금과 개인사업가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흔히 ‘돈주’로 불리는 개인사업가들로부터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다거나 국영기업의 명의 또는 생산시설을 이들에게 대여하여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등의 현상이 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제재 대응 차원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무리하게 동원하다 보면 의도와 달리 시장과 사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공식 금융부문을 활용하여 시중 외화를 흡수하려는 시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외화 유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당국의 경제 통제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되도록 많은 외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전자카드 보급 확대, 외화예금 장려, 외화상점 확대 등의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불안한 정세 속에서는 시중의 외화 보유자들도 역시 외화를 내놓기 꺼릴 것이므로 당국의 이러한 시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제재 국면이 장기화되고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개혁 확대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 당국의 행태와 불안한 대외정세를 고려해 볼 때, 시장화 추세를 조금 더 공식화해주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은 정치 및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대외관계도 우호적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당국이 어느 정도 개혁 실험을 계속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적 개혁의 성과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 당국은 국산화 정책, 시장부문 활용, 시중 외화 흡수 등의 버티기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권 수립 70

---

주년을 기념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놓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일시적·제한적으로만 유효할 수 있을 뿐이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뜻밖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결국 북한의 제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제재에 따른 대외경제관계의 위축이 대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석진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 홍제환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

### 3. 사회동향

#### 가. 2017년 정세

2017년 북한 사회분야에서 나타난 특징적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전민 ‘총돌격전’을 강조하며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자력자강’, ‘자급자족’과 관련된 일련의 주민 동원과 각종 대회 및 선전 활동에 주력한 부분이다. 북한은 2017년 한 해 동안 신년사에서 ‘총돌격전’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12월에 예정된 ‘만리마선구자대회’까지 대북제재에 대응한 내부적인 결속과 동원에 주력했다. 둘째, 김정은 집권 5년의 업적을 선전하는 각종 우상화 작업이 강화된 한 해였다. 당 및 국가 최고 수위, 공화국 원수 칭호 등 집권 5년을 결산하는 각종 성과 제시에 주력했다. 셋째, 여명거리 준공을 비롯해서 건설부문의 성과를 강조하는 대내외 선전과 주민 동원이 지속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대규모 도시 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고 여명거리는 집권 5년을 상징하는 치적으로 선전되었다. 넷째, 김정은은 육아원·애육원·초중등학교 등 전국적으로 교육시설 신설·개건에 집중하며 민생 시찰을 이어가는 행보를 보였다. 총론적으로 대북제재에 대응한 내부 결속, 애민 이미지 구축, 건설부문 치적을 포함한 집권 5년 성과에 대한 상징화 작업이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진 한 해였다.

우선 2017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마감단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전민이 나서 모든 부문에서 성과를 내는 ‘총돌격전’을 펼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초

---

부터 전민 ‘총돌격전’을 강조하는 각종 집회가 지역과 단위별로 이루어졌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을 맞이하여 ‘총돌격전’을 재차 강조하며 4월에 청년돌격대 ‘자력자강’ 성과 전시회를 개최해 열기를 몰아간 이후 7월에는 화성-14형 발사 성공을 선전하며 사회 전 부문에서 최후 승리를 향한 ‘돌격전’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대북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11월 7일)하여 ‘100% 자급자족’을 주문하며 2017년을 ‘총돌격전’으로 마무리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연중 계속된 ‘총돌격전’에 따라 각 부문에서 생산성과를 내기 위한 동원과 선전이 계속되었고 12월에는 이를 결산하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총돌격전’ 구호 아래 이루어진 각종 동원과 선전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 완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대외적인 고립이 심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에 대응하여 주민들을 결속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김정은 집권 5년의 업적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며 전사회적인 이상화를 보다 심화시켰다. 4월 7일 김정은의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 추대 5주년과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 5주년을 맞아 김정은 집권 5년의 업적을 선전하는 데 주력했다. 5년 업적으로 7차 당 대회 개최, 핵무력 건설, 각종 민생 관련 현지도, 대규모 건설 및 거리조성 등을 꼽았다. 특히 8월 15일에는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개최하여 ‘2017 백두산선언’을 발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각하’로 표현하며 “인류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향도하시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칭송한 바 있다. 이런 업적 선전 및 이상화는 사회 각 하부단위의 주민들에 대한 ‘5대 교양사업(위대성교양, 김정일애

---

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의 일환으로 전파되었다.

셋째로 2017년에도 건설부문 성과를 김정은의 치적과 이상화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회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내내 도시 건설사업을 강조해 왔다. 2012년 창전거리, 능라인 민유원지, 만경대유회장,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2013년 과학자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2014년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2015년 원산시 육아원·애육원·초등등학교,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016년에는 백두산청년영웅3호 발전소, 중앙동물원,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류경안과종합병원, 평양자라공장, 2017년에는 여명거리, 평양초등학교, 류원신발공장 등 매년 대규모 거리 및 도시 건설을 진행해 왔다.

주목할 부분은 2017년 4월 13일 해외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여명거리 준공식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여 여명거리를 대북제재 무용론과 자신의 리더십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데 활용한 부분이다. 특히 대북제재 무용론을 펼치기 위한 선전전의 일환으로 대규모 건설 및 도시 건설성과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 년 내내 주민들을 건설 현장에 동원하였고 속도전식 건설과정에서 산업재해가 속출하는 등 주민들이 겪은 고통이 컸다. 이런 건설사업은 시장화와 연동되어 자재시장, 인력시장, 운송·운수시장의 활성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넷째,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학교, 소년단야영소 등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신축 및 개선이 2017년에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김정은의 애민 행보를 보여주는 활동으로 강조되었다. 이밖에 양로원, 노동자합숙소, 강성원, 봉화원 등 전국적으로 주요 복지 관련 시설을 신축·개축하는 데 2017년에도 주력했다. 2017년에는 평양초등학교, 황주중등학교, 만경대혁명학원 등에 대한 신축·개축이 이루어졌다. 이곳 모두 김정은이 직접 현지도도를 하며 건설 동향을 챙긴 것으로 보도되었고 준공식에도 참석하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실시(4월 1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김정은의 ‘후대사랑’을 상징화하는 각종 공식담론이 나왔다. 이런 행보는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애민’ 이미지를 심어주고 대북제재와 핵·미사일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제도가 갖는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청년세대에 대한 통치 차원의 관리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 나. 2018년 전망

2018년에는 정책방향 및 구호 측면에서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을 강조하며 ‘완성’ 이후의 민생과 경제부문의 발전을 강조하는 구호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인민중시’, ‘청년중시’ 등의 확장판으로 ‘핵무력 완성’ 국가에 걸맞는 지위와 위상을 인민생활과 경제부문에서 달성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

---

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대내적인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왔던 만큼,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이를 일단락 짓고 주민들을 위무하는 차원의 행보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7차 당 대회 이후 숨 가쁘게 진행되었던 각종 속도전식 균중 동원으로 인해 높은 피로감을 느껴왔던 사회에 일정 부분 숨통을 트여주는 차원에서 2018년은 인민 친화적인 애민 행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애민 행보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강조되어 온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건설물의 완공을 목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여명거리 이후의 새로운 인민 친화적 건축물이나 도시 건설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핵·미사일 무기체계 완성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각종 상징화 작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핵·미사일 '완성'에 집중하면서 다소 소홀하게 다루었던 사회 통제체계 및 도시 관리부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쳐오면서 사회 전반의 시장화로 인한 통제이완 및 도시 관리부문의 보완점 등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는 데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에 실시되는 인구 일제조사를 계기로 북한체제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학적으로 중요한 연령층이 된 시장세대를 체제 보위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과 조치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새로운 세대의 충성심을 다잡고 고취하기 위해 청소년

---

을 상대로 한 사상교양 및 조직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5대 교양’을 변화된 ‘청년’ 세대의 의식과 행동 양태에 맞게 주입하고 학습시키는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늘어난 핸드폰과 개인 통신, 민간 운송회사의 확대와 주민 이동성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도시 차원에서 주민 생활을 통제하는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있다.

- 홍민 북한연구실장

---

## 4. 북핵 및 대외동향

### 가. 2017년 정세

2017년 북핵 정세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엄중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북한 간 ‘강대강’ 구조가 더욱 심화되면서 비타협·대결 국면이 지속되었다. 2017년 북한의 핵 고도화는 1차례의 핵실험과 3차례의 ICBM 발사 등을 통해 거의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고강도 도발에 대응한 국제적 대북제재와 압박의 수준은 한층 높아졌다. 미국은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북·대중 동시 강제전략(compellence strategy)을 본격화했다. 유엔은 제재 결의안 2375호를 통해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실질적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2017년 북핵문제를 통해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북한의 핵 고도화가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우선 북한은 9월 6차 핵실험에서 수소탄 제조 능력 확보에 성공했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의 ‘시험용’ 수소탄 실험 이후 20개월 만에 핵융합 기술 능력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기폭 관련 고도화는 2017년 완성되었고, 기술적 차원에서 더 이상의 핵실험은 불필요한 단계에 진입했다. 아울러 북한은 2017년 한 해 동안 총 17번의 미사일 실험 도발을 강행했고, 이중 14번의 실험을 성공시켰다(11월 30일 기준). 특히 3차례의 ICBM 실험은 모두 성공했으며 괌 인근 지역까지 유효 사거리로 하는 IRBM(화성-12형) 실험의 실전화 능력까지 입증했다.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ICBM의 재진입 기술

---

과 항법유도기술력만 확보한다면 미사일 고도화도 사실상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둘째, 북미 간 비핵화 타협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는 북한이 두 번의 대화 기회를 거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우선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확정되기 직전인 2017년 3월, 미국의 Tillerson 국무장관이 제안했던 소위 4NO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 고강도 도발로 스스로 타협과 대화의 계기를 걷어찬 부분이다. Tillerson 장관이 밝힌 4NO는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북한 정권 붕괴,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이동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체제보장 약속이었다. 이들 내용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요구해왔던 전략적 관심사에 대해 미국이 예전보다 상당히 전향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4월에만 북극성-2형과 무수단 미사일 등 총 4번의 미사일 도발로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외면했다.

미국의 대화 재개 조건 완화에 대해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점 또한 비타협 정세의 지속의 또 다른 원인이다. 북한이 2017년 7월 미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ICBM급 화성-14형 실험 도발을 2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존의 대화 재개 조건을 낮추며 북한에 대한 '관여'를 가동했다. 미 국무부는 8월 16일 북미 대화를 위한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핵실험 중단,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 중단 등 3가지이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미국이 제시한 대화 재개 조건 중 가장 문턱이 낮은 주장이었다. 즉 북한이 도발 유예만 선언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대화 재개 조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9월

---

3일 6차 핵실험을 그리고 11월 29일에는 ICBM급인 화성-15형 발사를 강행했다.

셋째,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비타협적 입장을 견지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 등의 '제재·압박·비핵화' 프레임, 북한의 '군축-평화협정' 프레임에 대한 중재안으로 소위 중국의 쌍중단(freezing for freezing) 제안의 수용을 북미 양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2017년 증반 이후 이에 대한 명시적 반대를 표명하고, 미국 또한 이를 채택 가능한 중재안으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중재안의 효용이 크게 반감되었다. 북한 입장에서는 추가 시험과 도발 등을 통해 핵무력을 조기 완성하고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일거에 높여야 하기 때문에, 도발 모라토리움에 대한 전략적 편익이 낮다. 미국 또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 합동군사훈련 자체의 의제 설정화가 북중 양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대중·대북 동시 강제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중국이 이에 일정 정도의 순응이 불가피한 정세가 형성되면서, 북한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중국의 역할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2017년 북한 대외부문 정세의 주요 특징이다.

## 나. 2018년 전망

2018년 북핵 정세는 2017년에 비해 훨씬 불안정하고 위태로울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면서 비핵

---

화 타협 가능성은 훨씬 난망한 정세가 지속될 것이다. 우선 북한은 남은 핵 고도화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전략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북한은 2018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추가 제재나 압박에도 불구하고 ICBM 재진입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전화 능력까지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3~5회 정도의 추가 관련 실험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2017년 중반기 이후 유예하고 있던 SLBM 고도화 실험도 강행할 것이다. SLBM의 전략적 장점인 2차 타격능력과 핵능력 보존 능력을 북한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기술적 준비만 완료되면 기존 북극성-1형과 2형의 성능 개선 뿐 아니라 공개하지 않고 있는 3형의 실험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기술적으로 불필요하지만 지난 6차와 유사한 종류의 7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 등을 통해 '정치적' 핵무력 완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핵무력 증강에 더욱 힘쓸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선택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직접적이고 강하게 침해함으로써 미국의 강경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을 유도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요격, 한반도 내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SM-3의 한반도 배치, 동해안의 해상봉쇄 등을 포함한 강력하고 다양한 군사옵션의 실제 투사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중국 또한 미국의 대북 강압에 일정 수준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간접 강압(second sanction)에 대한 중국의 취약성이 여전히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본격화하면서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 및 아프리카, 중남미, 아세안, 중동의 일부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외교관계 축

---

소 및 단절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적 강압은 대북 국제제재 레짐의 강화를 추동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2018년에는 북미관계의 '강대강' 구도가 더욱 구조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상호 간 기존 요구 수준을 더 이상 낮출 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1~2년만 더 견디면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 맹신하고 있고, 미국은 1~2년만 더 강압하면 북한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북미 모두 상호 강압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은 제재 강화로 인한 점진적인 국가 실패화 속에서도 핵무기 고도화 완성을 통한 핵무력 증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대북제재와 압박의 수위가 훨씬 강화되고 북한의 제재 저항 능력이 단기간 상당히 훼손된다면, 2018년 중·하반기경 북한이 대화에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즉 북핵 고도화가 마무리되고 제재의 수준이 극에 달하는 시점에서 북미 간 대화 재개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사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이것이 북한 지도부의 진정한 핵무력 포기 결심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적 고도화 달성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간 동안 실전 검증된 핵무기를 대량생산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동결을 통한 타협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는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 기술을 완료하고 상당한 양의 실전용 핵

---

무기를 갖춘 그 이후가 될 것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에 대한 강압 메시지로 ‘미국과 힘의 균형’을 자주 언급하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공격용 무기의 대량 보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2018년 한 해 동안 가급적 핵 고도화 과업을 조기 완수한 이후 핵무기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전년에 비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속내는 신정부 등장 이후 북한의 도발이 이전에 비해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전향적인 대북 관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5월 이후 1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해 총 11차례의 전략 도발을 강행했다. 이는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 내 탄핵정국 형성으로 진보 진영의 정권 획득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 어떤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비타협 전략을 통해 핵무력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 노선을 채택했음을 의미한다. 즉 한국 신정부가 어떠한 대북정책을 제시하든 상관없이, 북한은 자신들이 평가하고 계획했던 대남 정책 기조를 굳건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통한 전략적 지위 고양, 그리고 국가 생존환경의 주체적 구축에 한국의 도움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큰 방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2018년에도 북한은 그들의 최우선적 국가 과업을 달성하는 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상당히 낮게 평가할 것이다. 2018년 대북제재 레짐은 한층 강화될 것인데,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국면 하에서 북한의 요구와 필요에

---

한국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은 한국이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큰 방해도 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할 것이다.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강압의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에는 한국의 대북 관여 정책이 투사될 여지가 상당히 협소해질 것이며, 한국의 적극적인 대미 편승이 불가피한 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정성윤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

## 5. 대남동향

### 가. 2017년 정세

북한은 2017년 신년사에서 남북 간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을 한국정부에게 떠넘겼다. 한국 정부가 동족대결정책·대미사대매국행위·반공화국제재압박·북침전쟁소동을 벌였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국정부가 핵·미사일을 묵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

상반기 대남 동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등 한국 국내정치에 영향을 받았다. 한국 정권교체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북한은 국내정치 개입을 시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간 반인민적·반민족적·반통일적 죄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대선국면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염두에 두고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을 극악한 체제 대결론, 북침 전쟁론, 외세 추종론이라고 비난하면서 보수정부 대결정책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호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국정전략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베를린구상을 통해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

제재와 대화를 통한 비핵화, 비핵화와 남북관계 병행 추진 원칙을 밝혔고, 베를린구상 후속조치로 남북군사당국자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대화제의를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수차례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핵·미사일 개발은 남북관계를 냉각시켰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 시험(3월 18일), 북극성-2형 발사 시험(5월 21일), 화성-12형 발사 시험(5월 14일, 8월 29일, 9월 15일), 화성-14형 발사 시험(7월 4일, 28일) 등 탄도미사일 시험을 연달아 진행했다. 북한은 7월 4일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북 군사공격을 거론했고, 북한은 8월 9·10일 광도포위사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국제사회는 7월 4일, 28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더 줄었다. 김정은은 9월 15일 화성-12형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sup>1</sup> 북한은 핵무기 대상 협상 불가를 밝히면서 미국의 적대적

---

<sup>1</sup> 『조선중앙통신』, 2017.09.16.

---

정책과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핵무기와 탄도 로켓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국정부의 평창올림픽 참가 제안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1일 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이 평창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수백 발의 미사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sup>2</sup> 북한은 정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11월 29일 신형 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남북관계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부딪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 나. 2018년 전망

북한은 2018년에 북핵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부각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대남정책 목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대남 평화공세를 통해서 북핵 위기로 인한 미국의 대북 군사 위협을 완충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 개선이 돌파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 전략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조건에서는 한국정부가 전향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좁기 때문이다.

북핵 정세는 비관적이다. 미국의 북핵 대응과 북한의 핵정책을 고

---

<sup>2</sup> 『뉴시스』, 2017.10.31.

---

려할 때, 북핵 위기는 2018년에 최악의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핵무기 탑재 ICBM 양산을 통한 국가핵무력 조기 완성을 목표로 핵실험과 수차례 중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를 진행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제재·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탑재 ICBM 양산에 다가설수록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이 커지고 한반도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완충수단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대남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 평화공세의 목적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우회하고 미북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 참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도 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 남북관계는 대화 분위기로 급선회할 것이다. 북한 대남기구들은 앞다퉈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을 주장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남북한 간 기본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조건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대남평화공세 의도는 북핵 위기 국면에서 대미군사위협을 줄이고 대북제재의 틈을 만드는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활용하는 것이기

---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전제 조건으로 한국정부에 핵 국가 승인, 대북제재 중단, 대북유화정책 실행 등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정부가 대미굴종 대결정책과 북침전쟁소동을 중단해야 남북관계를 개선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남북한이 북핵문제에 막히면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전략적으로 남북대화에 임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북핵 위기 국면에서 남북관계 병행·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북한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미북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핵 위기 국면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미 정책 조율을 바탕으로 ‘선 남북한 신뢰 구축, 후 북핵문제 해결’, ‘북핵문제의 점진적·단계적 해결과 평화협정 논의 병행 추진’ 등의 원칙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남북한은 기본적인 신뢰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일정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근본적 의견충돌이 예상되는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 남북한이 북핵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도 어렵고, 북핵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올라오는 순간 남북관계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불참하면, 평창 패럴림픽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평창 패럴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해서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에 관한 편의 제공과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야 한다. 남북체육회담에서는 올림픽 이후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남북한 교류 방안과 북한 스포츠 육성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제안함으로써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을 정례화하고, 남북대화와 교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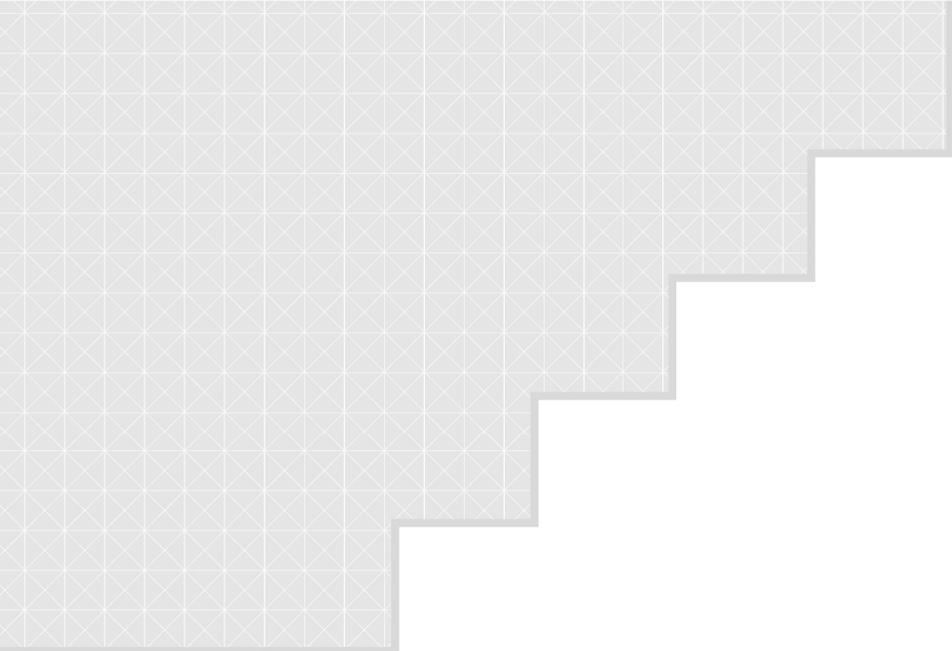
---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대남도발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다. 올림픽 기간 대남도발은 북핵 대북제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국의 외교적 고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남평화공세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비난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면 평창 패럴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 국내정치에도 개입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정부를 미국 하수인이나 괴뢰 패당으로 매도·비난하면서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할 것이다. 야당은 친미대결세력·반통일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대중적 반대투쟁을 선동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관계를 단절하기 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대남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대남도발 양상은 군사도발보다는 사이버 공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군사 옵션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대남 군사도발은 군사적 충돌을 촉발하고, 대규모 군사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군사적 충돌 위협이 낮은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해킹,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것이다.

- 오경섭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 III

## 남북한관계





---

## 1.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 가. 남북대화

#### (1) 2017년 정세

2017년 5월 진보 정부의 출범은 그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리고 그 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베를린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구상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비정치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스포츠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등의 남북교류 방안이 담겨있다.

남북관계 진전에 탄력을 줄 것으로 평가 받았던 베를린구상에 맞추어 정부는 7월 19일에 적십자회담과 더불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통일부가 밝혔듯이 이번 대화 제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되었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본격적인' 남북 간 대화 제안은 아니었다.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미국은 대화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즉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충분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대북압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제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

대화 당사자인 북한은 어떠한 공식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는 실현되지 못했다.

## (2) 2018년 전망

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이를 위한 남북 간 대화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민간교류 나아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대화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구상이 2018년에 ‘본격적인 남북회담’으로 이어질 여건이 현재로서는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본격적’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대화 당사자인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현재 남북대화의 가장 큰 장벽은 북핵이다. 핵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이 핵포기나 핵동결을 전제로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북한은 핵과 평화협정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우리보다 미국을 직접 대화상대로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핵포기가 아니라 대북제재 국면 전환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여건의 변화 없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두 번째 우리의 대화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의 대화 의지와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남북대화 제의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화 의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북한이 믿을 만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

남북대화가 걷을 수 있는 성과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반면 중국은 대화로 북핵문제를 푼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의미하는 대화가 반드시 남북대화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2017년 10월 11일 개최된 한중 다낭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북중관계가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로 냉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남북대화 성사를 위한 중국의 노력과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8년에는 본격적인 남북대화의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국제적 평화제전을 통해 다양한 목적의 남북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교류를 위한 남북 간 대화가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등의 다양한 남북 간 현안을 위한 회담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 주변국과의 외교 현안 해결에 집중하여 남북대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노력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 외교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특히 남북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 한반도 통일에 필수적 전제조건임을 역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베를린구상대로 다각적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정상급 혹은 고위급 남북회담의 추진에 앞서 비공식적 민간교류나 실무자급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실현되도록 북한 및 주변국과의 관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불협화음을 낼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교류를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보다 국제사회가 제재완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남북한 화해 분위기를 충분히 숙성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한 접촉을 그동안 단절된 남북관계의 전면적 회복 기회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같은 핵심사안의 논의장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대신 평창올림픽 이후 다른 형태와 수준의 지속적인 남북대화도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남북 간 이견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강경 혹은 유화적 태도와 관계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 남북대화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민태은 통일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 나. 남북교류협력

### (1) 2017년 정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첫째, 상호 존중·화해 협력·신뢰 증진 등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는 동시에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무게추는 제재와 압박에 실렸으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의 한 축인 경제협력 부분을 살펴보면,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재개한다는 원칙 하에 일정한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공동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인해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됨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개별국가의 대북 경제제재도 한층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6일 정부는 북한의 계속된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

---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렇듯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대북 경제제재 강화를 초래하였으며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1월 10일 지난 시기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기업들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남북경협의 미래를 지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660억 원 규모의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북교류협력에서 경제협력 분야와 더불어 한 축을 담당하는 사회문화교류 분야를 살펴보면, 정부는 현재의 딱 막힌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적 상황에 구애를 덜 받고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육, 종교, 언어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재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학술, 역사, 교육,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제도화시키려는 원칙을 세웠다.

남북 간 교류가 전무했던 경제 분야와는 달리 사회문화 분야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 하에서도 간헐적이거나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4월 2일부터 8일까지 강릉에서 개최된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자 세계선수권 대회'에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대표팀이 참가하였고 4월 3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아시안컵 B조 예선'에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방북하여 출전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하여 시범공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

일련의 남북 간 체육교류의 진전을 바탕으로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유엔과의 협력을 비롯하여 국제사회 개별 국가들의 성원을 당부하고 있다.

## (2) 2018년 전망

남북경제협력의 경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등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2018년에도 남북 간 경제협력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데에는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지속적으로 강화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나 협력체의 설립과 확장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재개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다만, 사회문화 분야에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정치적 색채가 배제된 체육, 문화, 종교, 예술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된다면 이는 경제 분야를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설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2018

---

년 남북교류협력의 중대기로는 2월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또는 3월에 이어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즉,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이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교류협력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우태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 2. 북핵 대응과 제재

### 가. 2017년 정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목표 중 하나는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이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동원하겠다는 수단은 제재와 압박이며 또 대화와 관여다. 그렇다고 상반된 성격을 지닌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제재와 압박을 가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는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접근이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이 당면한 목표라고 언급하였다.<sup>3</sup>

우선 정부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리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을 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sup>4</sup>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기존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은 물론 신규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sup>5</sup>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

3 “문재인 대통령 미국 CBS방송 인터뷰,” 『연합뉴스』, 2017.06.20.

4 “정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지지,” 『연합뉴스』, 2017.06.30.

5 “한·미·일 6자 수석들, 신규제재로 대응,” 『연합뉴스』, 2017.07.11.

---

우리 정부에서 나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sup>6</sup>

우리 정부는 다자제재는 물론 일방적인 제재도 지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회에서 미국과 세컨더리(보이콧) 옵션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sup>7</sup>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단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재 옵션으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단독 제재도 정부는 시행하고 있다. 통일부에 의하면 금융제재와 수출입 통제·북한산 반입물품 통제·해운통제 등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우리 주도 대북제재라고 언급하였다.<sup>8</sup> 외교부도 북한의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안보리 제재 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sup>9</sup>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눈에 띄게 제재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제재에 굴복하여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을지는 더더욱 미지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하였던 모든 노력과 조치들로부터 얻은 교훈은 쉽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

6 “문재인 대통령, 국제사회와 함께 강한 응징,” 『미국의 소리』, 2017.09.02.

7 “미국 측과 세컨더리보이콧 협의 중,” 『연합뉴스』, 2017.07.10.

8 “통일부, 독자제재 검토 중,” 『연합뉴스』, 2017.08.08.

9 “남 정부 첫 독자제재,” 『연합뉴스』, 2017.11.06.

---

## 나. 2018년 전망

대북정책 기초를 두고 지난 20년간 제재를 하자는 쪽과 대화를 하자는 쪽은 끊임없이 대립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우리 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재를 해서 대화를 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대화를 먼저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제재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면 제재의 강도가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져야 한다.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제재를 북한에게 가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다. 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은 북한에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가할 의지가 없다. 중국이 그나마 몇 개 남지 않은 대북한 레버리지(leverage)마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에 압박을 가할 의지가 없다. 중국 물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가하거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8월 중·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의 괌 기지를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했다.<sup>10</sup> 또한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태평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소탄 시험을 할 수 있다”고 발

---

10 “김정은 괌 타격...미와 전면전 가능성,” 『연합뉴스』, 2017.08.09.

---

언하였다.<sup>11</sup> 만일 북한이 이와 같은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여기게 될 것이며, 미국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최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다. 반발이라도 하는 듯 북한은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이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sup>12</sup> 북한의 핵능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북한은 일정한 선은 넘어가지 않고 있다. 이번 화성-15형 미사일도 고각발사를 했다. 정상각도로 발사하여 자신의 미사일이 괌이나 미국 서부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 과시는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태평양 해상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여 주변국을 자극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정한 선을 넘는 순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미국의 압박도 군사적 수준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북한은 안다.

북한은 자신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셈법이지만 미국과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제재 수준도 계속될 것이다. 어쩌면 이 와중에 먼저 북한이 대화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핵을 포기하려는 대화가 아니라 핵을 인정받으려는 대화를 제기할 것이다. 내년에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얽혀있는 매듭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 홍우택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11 “미북 군사위협 위험 수위 오가,” 『연합뉴스』, 2017.09.24.

12 “북,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 『연합뉴스』, 2017.11.29.

---

### 3. 통일인식

#### 가. 2017년 정세

한국 국민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유연하게 변화하는 가변성이다. 둘째, 이러한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기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다. 예를 들어, 북핵 실험이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같은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갑작스레 변화하지는 않는다. 셋째, 이른바 ‘남남갈등’론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진보와 보수,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의 인식의 격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남한 내 정치 갈등의 가장 핵심이라는 남남갈등론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 이 세 번째 특징이 갖는 함의는 이른바 “친북”과 “반북”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갖고 있는 복잡한 태도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각 시각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합리성을 갖고 있다.

2017년의 통일인식은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최근 50%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중앙일보, 그리고 통일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여론조사

---

를 통해 연구해오고 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하면, 90년대 초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90%를 넘었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50% 정도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통일 및 북한인식의 가변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북핵 실험 및 국지전 성격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은 동시에 통일 및 북한 인식의 연속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7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 문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진보 응답자의 44.7%, 중도 응답자의 49.5%, 그리고 보수 응답자의 60.9%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었다. 분명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진보와 보수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그렇다고 이 차이가 화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격차라고 해석할 정도는 아니다. 진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보수 응답자의 40% 가량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통일 및 북한인식의 특징을 바탕으로 2017년의 통일인식 변화를 분석해보자. 우선 통일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여러 조사에서 5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식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 가능한 상대라는 인식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2017년 3월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뒤이은 5월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진보적 정치인들과 정당들을 친북이라고 공격하는 이른바 이념 공세가 등장하기는 했다. 그러

---

나 탄핵사건의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이념과 북한에 대한 태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는 주요 선거기간 동안 지나친 이념 논쟁이 항상 건전한 정치적 토론을 마비시켰던 것에 비해 이는 중요한 발전이라고 보이며, 앞으로 한국 선거가 이른바 ‘북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 나. 2018년 전망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선거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 여론 자체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지지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8년 통일인식과 북한인식의 변화가 있다면 그 핵심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6월로 예정된 전국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인식과 북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의 핵도발로 극단 상황 직전까지 몰린 한반도의 정세일 것이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혹은 대통령 선거와 달리 북한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물론 개별 유권자들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는 중앙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특성상, 극단적인 이념공세나 색깔론, 그리고 선거 이슈를 북한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 등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들이

---

출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 문제가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은 강원도 일부 지역 및 서해 도서지역, 그리고 경기도 접경 지역 등 지리적 요인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선거에 항상 영향을 주는 지역들이 있으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일인식과 북한인식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계속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50%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는 상당 부분 이전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반사적 지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단순히 반사적·피동적 지지를 넘어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지지로 내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 포함된다. 즉, 현재의 높은 지지율이 2018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넘어 지속될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거나, 혹은 북한이 협상에 응하는 경우도 통일인식 및 대북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단, 이 경우는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은 가변성과 안정성의 성격에 동시에 갖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계속적인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낮아지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지지 또한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그 폭은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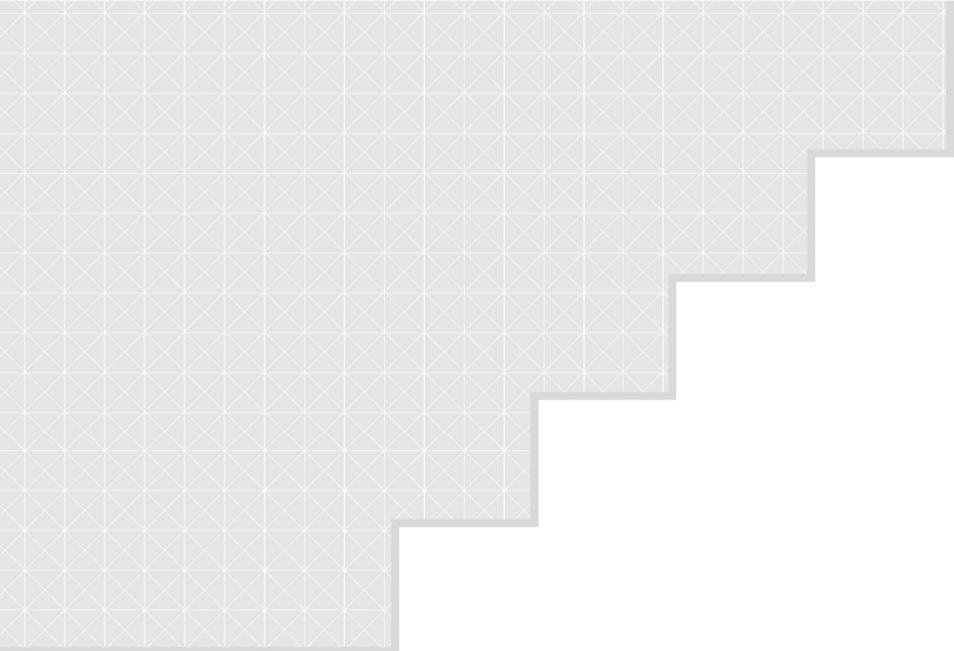
---

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의 경우, 북한이 전향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북한을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여러 대북정책 중 가장 찬반이 갈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북한과의 경제협력정책이다. 이 정책은 보수층의 반대가 굳건하면서도 진보층의 찬성이 높아서 다른 통일·대북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 현재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2018년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경제협력 이슈가 불거진다면, 이는 국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상신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IV

##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

## 1. 북한인권

### 가. 2017년 정세

2017년 한 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논의는 진일보를 이루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3월 24일)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11월 14일)에서는 각각 55개국과 61개국의 공동제안을 바탕으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consensus)로 통과되었다. 인권이사회 결의의 경우 북한이 해외에서 자행한 범죄에 대한 규탄,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 포함되었고, 북한 해외노동자,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 책임성 규명,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주민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 언급 등이 포함되었다. 총회 결의의 경우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남북대화를 강조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억류자 영사접견 등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연락확보 등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였다.

개별국가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노력도 진행되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세 번째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22년까지 효력이 연장되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논의된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관련 책임성 규명의 맥락에서 대북제재와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리스트를 연계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2017년 1월과 10월에 각각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와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를 연계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1월 보고서에서는 김여정(선전선동부) 등 7명과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2개의 기관, 10월 보고서에서는 7

---

명의 인사와 3개의 기관이 추가 명시되었다.

유엔뿐 아니라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북한인권 개선 관련 강력한 조치는 2017년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2월 13일)이고 두 번째는 북한에 억류중이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웹비어가 미국 송환(6월 13일) 후 엿새 만에 사망(6월 19일)한 사건이다. 실제로 제72차 유엔총회 연설(9월 19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침해 실태와 연계하였고,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토 웹비어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국내 외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017년 9월부터 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 여행봉쇄령이 내려졌고, 미 하원은 오토 웹비어 복핵제재법(H.R.3898)을 통과(10월 24일)시켰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해 북한은 특히 미국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표출했으며, 미국이 제재와 인권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인권 개선노력과 관련해서는 일련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한 예로 북한은 그동안 유엔 차원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의 일환인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배제해 왔지만 2017년 사상 처음으로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Catalina Devandas-Aguilar)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방북(5월 3~8일)을 허용하여 장애인 인권개선 관련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작년에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5·6차 통합보

---

고서를 심의(9월 29일)하고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작년에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제2·3·4차 통합보고서를 심의(11월 8일)하고, 북한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및 대처 등 여성권리 전반에 대해 권고를 발표(11월 17일)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체제에 위협이 적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국제사회 인권메커니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국내의 경우, 2017년은 작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2016년 3월 3일)의 일환으로 설치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핵심 제도적 기제의 활동이 본격화된 한 해였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경우 출범 1주년(9월 28일)을 맞이하여 1주년 기념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북한인권 침해 기록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 출범(2016년 10월 11일) 이후 통일부에서 첫 자료를 이관(4월 20일)받은 이래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 보존기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법무부 보존 자료는 통일 이후 통합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인권침해 가해자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간주된다.

#### 나. 2018년 전망

2018년 한 해는 북한인권에 관해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컨센서스로 통과되고 있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가 2005년 이후 14년째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유

---

엔 인권이사회 결의 역시 지속적으로 컨센서스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새롭게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호주와 슬로바키아의 경우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전망이다. 북한인권 사안 관련 전통적인 자유권 및 사회권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북한 해외노동자, 납북자, 북한 억류자 사안 등 북한의 대외관계와 대내환경이 연계되는 사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2014년 이래 북한인권 사안을 유엔 안보리 공식의제로 상정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규명 논의 이후, 대북제재와 북한인권 개선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국가 중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 사안을 대북제재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전망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2016년 2월 7일) 이후 통과된 대북제재법(H.R.757)에 재무부가 핵 및 미사일 도발 관여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국무부가 인권침해 가해자를 식별하고 적시할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 및 개별국가 차원의 대북 인권공세에 대응하여 여성 및 아동 관련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대해 북한의 순서는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 당국은 대북제재의 결과로 북한 내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 등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할 것이며, 이를 2019년 UPR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

---

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 2016년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이 발효(2017년 1월 5일)됨에 따라 2년 내에 장애인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18년 한 해 이와 관련된 일련의 개선 조치가 기대된다. 북한은 2017년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방북은 허용한 바 있지만,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경우 2018년에도 방북 가능성은 낮다.

국내적으로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이하여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리라고 기대된다. 관련하여, 2018년에는 북한인권법에 제시된 대로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태동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 인권대화의 경우 전반적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그 내용 및 형식이 좌우될 것이다. 정부 간 직접접촉이 어려울 경우에는 남북적십자사와 같은 중간 매개자를 통한 대화 재개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회담의 주요 안건도 남북한 당국이 대화의 물꼬를 쉽게 틀 수 있는 연성이슈를 중심으로 편성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하여 대북제재라는 한 축과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또 다른 축의 상호조율이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 한 해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의미 있는 노력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이 포함되었는 바, 정부 출범 1주년인 5월을 전후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예상된다. 북한인권재단은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며, 정부와 민간단체 간 협조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과 협조하여 북한인권 실

---

태조사 및 연구, 북한인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에 이어 2018년 한 해 동안 대북제재 레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논의와 상호 조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교류 및 협력, 개성공단 재개,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의 사회적 이슈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또한,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래 2017년부터 더욱 본격화된 한국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더욱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의 결과에 대한 홍보와 서울유엔인권사무소(OHCHR in Seoul)와의 협력 등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인권 실태분석 및 연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조가 더욱 기대되며, 이러한 협조과정에서 대국민 홍보 효과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 내 흩어져 있는 북한인권 개선 인프라가 더욱 축적되고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적 지원 및 남북 인권 대화 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업무체계 분화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북한인권 역량증진 등 북한인권정책의 종합적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장

---

## 2. 대북지원

### 가. 2017년 정세

2017년에도 유엔과 유럽연합 비정부기구 등 13개 기관은 여전히 북한 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과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식량안보, 보건, 영양, 식수 및 위생 분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1,300만 명을 대상으로 1억 1,400만 달러 상당의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sup>13</sup> 5년 단위로 유엔기구와 북한당국이 합의하는 ‘전략계획 2017-2021(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the DPR Korea)’이 2017년 다시 시행되었다.<sup>14</sup> 2017년 북한 중앙통계국은 유엔아동기금의 기술지원을 받아 영유아 및 여성들의 인도적 소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조사(Multiple Indication Cluster Survey)를 실시하였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은 20여 년 이상 장기화되고 구조화되어 이미 유엔 차원에서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2356호, 2371호, 2375호에도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제재의 대상이

---

<sup>13</sup> United Nations, *2017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17), <<https://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orea-needs-and-priorities-march-2017>> (검색일: 2017.11.30.).

<sup>14</sup> 2016년 9월 1일 북한외무성 민족조정위원회와 유엔상주조정관과 13개 기관이 서명하였다.

---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북한팀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실제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는 기구들이 기금 이전을 위한 은행거래상 지연, 지원물자 구매 허가 등으로 인한 지원 물자 수급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북사업에 대한 개별국의 공여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개별국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공여약속은 스웨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7년 연두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인도적 문제 해결노력으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필요성, 시급성, 투명성을 고려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국내 민간단체 지원 허용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월 유진벨재단의 다제내성결핵(MDR-TB) 사업을 위한 결핵약 반출승인만이 이루어졌다. 유진벨재단이 요청한 결핵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기자재 반출은 승인에서 제외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을 과제목표로 발표하였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허용,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 검토, 당국 차원의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으며, 북한과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민간의 접촉도 이루어졌다.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방북은 정부가 승인하였으나, 6월 북한

---

당국이 유엔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입장을 이유로 단체의 방북을 거부하였다. 정부는 9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사업(450만 달러)과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약품, 영양실조치료제 사업(350만 달러)에 대한 기금지원을 결의하였다. 북한은 제재피해조사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북한 내에서 ‘투명성 있게 진행되는 협조사업(인도적 지원 사업)’이 유엔제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 나. 2018년 전망

2018년에도 북한의 핵위협과 인권침해 문제에 특별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큰 규모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개별국들의 인도적 지원과 제재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대북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과 같이 북한 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제재가 인도주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수해나 가뭄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2018년에도 북한의 인도적 지원 차원의 응급구호의 요청은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북지원에 대한 개별국의 공여감소로 인해 당분간 북한 내 사업은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2017년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

---

의과정에서도 제재로 인해 아동 및 여성들에 대한 사업들이 차질을 겪은 점을 부각시킨 바 있다. 2018년에는 대북제재로 인한 생필품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당국은 제재(‘경제봉쇄’)로 인한 어려움을 부각시키면서, 관련기구들(아동후원협회, 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연로자보호연맹, 장애자보호연맹 등)을 통해 지원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2017년 8,5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및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과 북한 당국이 합의한 ‘전략계획 2017-2021’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여성권리 및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내부의 법률정비 및 제도 개선을 수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이어 북한은 2018년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인구총조사(Census)를 실시할 것이며, 이는 북한사회에 대한 중요한 기초데이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2017년 유엔인구기금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와 같이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및 유엔아동기금 등을 통한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

---

기구의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요청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민간단체들의 방북이 이루어지고 사업합의가 성사될 경우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기금지원의 규모는 단기적으로 크게 확대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구상에서 밝힌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풀기 위한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는 2018년 남북적십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및 재난구호협력, 혈액사업 등을 중심으로 남북적십자 간 ‘인도적 협력’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국제적십자연맹의 협력합의전략(Cooperative Agreement Strategy: CAS)을 넘어선 남북적십자 간 양자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사업의 규모 확대는 북한 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 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이터 접근 및 관련기관과의 정책대화를 허용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식량 및 비료 등 직접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지속되는 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 3. 북한이탈주민 문제

#### 가. 2017년 정세

전년 대비 2017년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입국자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한 때 연 3,000명 가까이 치솟던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줄곧 감소해 2015년에는 1,275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6년 1,418명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였다. 일각에서는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그 여파로 기존의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2017년 9월 기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8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36명에 비해 15%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크게 감소한 일차적 원인은 탈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탈북을 생계를 위한 단순한 월경행위로 간주하여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로는 목적에 관계없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016년에 ‘반짝’ 증가하였다가 올 한 해 다시 크게 감소한 까닭은 무엇일까. 북한 정권이 탈북에 대한 통제를 일관되게 강화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해답을 북한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북한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정치 동학을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에는 경유지인 중

---

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남북한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단속을 완화 또는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 배치 확정 이후 중국은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이후에는 탈북자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 7월에는 쿤밍에서 검거된 탈북자 17명 가운데 일가족 5명이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최근 한중 외교관계가 경색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안은 재입북 문제다. 2017년 7월 탈북자 출신 연예인 전해성(남한명 임지현)이 재입북한 뒤 북한의 대외용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에 출연하면서 남한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2017년 10월을 기점으로 재입북 사례는 총 26명으로 확인되며 이 중 2건이 2017년에 발생했다. 물론 전체 남한 입국자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며, 올해 특별히 자주 일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입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남한사회에서 비교적 정착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북한이탈주민이 재입북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이는 달리 보면,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재입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일종의 경고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남북한의 사회적·문화적 격차가 심화되었고, 보조금 지급이나 주거 제공과 같은 경제

---

적 지원만으로는 이들의 순조로운 적응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2017년 11월에 발생한 북한 병사의 판문점 귀순 사건이다. 지난 11월 13일 오후, 북한 군인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남한 측으로 귀순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판문점 경비대가 총격을 가해 병사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해상이나 군사분계선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는 '직접탈북'은 제3국을 경유하는 탈북경로에 비해 위험 요인이 크지만 탈북 브로커를 구하기 힘든 내륙 지방 주민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탈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총 15명의 북한주민 또는 군인이 9차례에 걸쳐 직접탈북을 감행하였는데, 이는 2015년부터 3년간 발생한 직접탈북 인원 29명 가운데 52%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탈북을 감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탈북에 대한 동인이 여전히 매우 강하며 북중 국경지역의 통제가 강화되자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나. 2018년 전망

북한 내부사정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18년에도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대북제재의 여파로 북한 내 경제사정이 악화된다면 생계를 위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주민이 증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김정은은 집권 이후 탈북에 대한 통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주민이 탈북에 성

---

공해 남한에 입국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변 경유 국가들이 탈북자의 통행을 얼마나 용인 혹은 단속하느냐에 따라 탈북 가능성이 다소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당국의 단속 여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한중관계가 호전된다면 중국이 탈북자의 자국 내 경유를 어느 정도 묵인해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한중 양국이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복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11월 한중 고위당국자 회담에서 한국 측이 북한이탈주민 사안을 거론한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한국 측은 선양에서 검거된 탈북자 10명에 대해 “탈북 당사자가 남한행을 원할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신병을 접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중국 측은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비록 이들은 안타깝게도 강제 복송된 것으로 파악되나, 탈북자의 안전과 신병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는 탈북자의 상당수가 남한에 입국하기 직전까지 머무는 경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공고해지면 향후 탈북자 신병 인도와 관련된 논의들도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안정적 경유지를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 병사의 판문점 귀순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언론의 귀추가 주목된 것은 북한 당국의 탈북 통제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사건 직후 *The New York Times*

---

기고문을 통해 북한 병사의 열악한 건강 및 영양상태는 “북한주민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window)”이라고 밝혔다.<sup>15</sup> 일반주민보다 배급상황이 훨씬 좋다고 알려진 군인조차 귀순을 감행한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북한 당국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경통제를 비롯해 탈북자 처리방침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입북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북한주민들의 탈북 의지를 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김수경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sup>15</sup>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4, 2017.

---

## 4. 3대 인도주의적 현안

### 가. 2017년 정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혼란의 영향으로 2017년 상반기 정부의 대북정책도 정상 가동되기 어려웠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도 열릴 수 없었다.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포함함으로써 해결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신청자의 전면 생사 확인·상봉정례화·교류 제도화 추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코리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10·4 정상선언’ 10주년인 동시에 추석이 겹치는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때 성묘 방문까지 포함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성묘 방문에 북한의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 정부가 우선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상봉이라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이산가족들의 숙원이었던 ‘성묘 방문’을 공식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통령의 공식 의지 천명 이후 7월 17일 대한적십자사는 8월 1일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하였

---

다. 고령 이산가족의 상봉과 이들의 상봉이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제안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8월 11일 ‘북한 강제납치피해자구출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를 통해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우리 여성공민을 하루빨리 공화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탈북자 김연희와 2016년 4월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협력 사업에 응할 수 없다고 이산가족 문제와 식당 여종업원 송환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엔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11월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우려를 표명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기본적 보호와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연락 허용을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였다. 특히 금년도 결의에서는 억류자의 인권보호가 새롭게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나. 2018년 전망

우리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문제는 해결한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되면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에

---

서 대화국면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등 평화공세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 특히 핵보유국으로서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선전 차원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선언하고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할 수도 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하면서도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에 대해 우리 당국에 의한 납치라는 주장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인식이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구상에서 밝힌 상봉 행사의 일환으로 희망한 성묘 방문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이 우리 당국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주장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이기 때문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제안할 경우 북한이 수용하더라도 여성 종업원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차원에서 '납북'이라는 주장을 펴는 동시에 북한은 여성 종업원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활용을 통해 역공을 펴는 전략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도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이산가족과 역류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공론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도 북한은 여성 종업원 문제를 고리로 역공을 펴려 할 것이다.

- 김수암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부록: 2017년 주요 사건일지

### 남북관계 일지

- 1.1 정부, 김정은 'ICBM 시험발사 마감단계' 발언 강력 규탄
- 1.2 북한, 한미훈련 시 임의시각에 자위조치 나서겠다고 위협
- 1.4 통일부, 북한 신년사에 대해 구체성 떨어지고 새 비전 제시가 없다고 평가
- 1.4 북한, 남북관계 개선은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라 주장
- 1.9 정부, 대북정책 제재·압박 기조 유지하지만 비핵화 대화는 가능하다고 표명
- 1.9 북한, 한미훈련 전면중지 결단 내려야 한다며 대남공세 강화
- 1.13 북한,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남한 정부가 악선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
- 1.13 북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에게 전가
- 1.15 정부, 남북관계 경색 책임 우리 정부에 전가한 것 유감 표명
- 1.15 북한, 정부의 '업무계획보고' 언급하며 대북정책 기조 유지에 대하여 비난
- 1.16 북한, 한반도 내 긴장상태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 정부의 적대시 행위들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
- 1.19 북한, 국방부의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북 전쟁 지휘부 제거'를 위한 특수임무여단 편성 계획 맹비난
- 1.29 북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맹비난
- 1.31 북한, 남북관계 개선하여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남한 정부가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2.1 북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실시 및 합동참모본부의 북핵·WMD 대응센터 설치 비난
- 2.2 정부, 한미 연례적 방어훈련을 왜곡하고 핵무력과 선제공격 운운하며 위협한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규탄
- 2.3 북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앞두고 남한의 핵무기부터 공개하고 철폐하라며 억지 주장
- 2.6 북한, 한미일 미사일 탐지훈련이 선제공격용이라 주장하며 비난
- 2.6 정부, 북한의 도발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적절치 않다고 표명
- 2.9 북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

- 2.10 북한, 남한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 맹비난
- 2.12 북한,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도발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
- 2.15 동해상 표류하던 북한 선박 선원 5명,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의해 구조
- 2.18 북한,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5명 판문점 통해 인수
- 2.19 정부,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배후에 북한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 발표
- 2.23 북한, 김정남 피살을 '공화국 공민의 쇼크사'로 지칭하며 북한 배후설은 남한이 짠 '음모책동'이라고 비난  
정부, 김정남 피살 관련 북한 배후설은 남한이 짠 '음모책동'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억지주장이자 궤변이라고 일축
- 3.1 북한, 한미연합 독수리훈련(FE) 비난하며 핵 무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
- 3.5 정부, 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 국내정치 개입이라며 규탄
- 3.6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미사일 4발 발사  
정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
- 3.9 정부, 수출입 금지 품목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생산에 쓰일 수 있는 물자 대폭 추가
- 3.12 북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연일 비난
- 3.13 북한, 한미 키리졸브(Key Resolve),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개시 비난
- 3.16 북한, 강릉에서 열리는 아이스하키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의사 표명
- 3.19 북한,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B-1B 전략 폭격기 타격하는 가상영상 공개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위협
- 3.20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국제아이스하키연맹(IHF) 세계 여자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을 위한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 3.27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에서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하고 통일부 맹비난
- 3.29 정부,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강릉대회 참가 승인
- 3.30 정부, 평양원정 여자 축구대표팀 방북 승인

- 4.2 여자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예선 참가차 평양으로 출국
- 4.5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북극성-2형 추정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도전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
- 4.6 정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 4.16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불상 미사일 발사 시도했으나 실패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
- 4.25 북한, 군 창건 기념일 맞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대규모 화력훈련  
정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탐지하는 탄도 탄 조기경보 레이더 2기 추가 도입
- 4.28 정부, 북한과의 대화 원칙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표명
- 5.11 북한,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한미 군사훈련 및 대북심리전 중단 등 적대행위 중단 요구
- 5.14 북한, 남한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전달
- 5.15 북한, 한반도 평화는 북미 간 문제로 한국이 끼어들 수 없다고 주장  
북한,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를 통해 남북합의 이행을 강조  
정부, 북한의 남북합의 이행 강조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 촉구
- 5.17 정부, 남북 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남북 간 대화채널 열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언급  
청와대, 북한과의 대화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있다면 대화 분위기가 진전될 것이라고 표명
- 5.19 북한, 대화와 대결은 양립불가하다며 남한 새 정부에 메시지 전달
- 5.21 정부, 북한이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재차 촉구
- 5.22 북한, 미·중·일·러에 대통령 특사파견을 두고 외세의존책동이라며 비난
- 5.24 북한, 강원도 철원 군사분계선(MDL)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를 날려보내 대남전단 살포

- 5.29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
- 6.11 정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민간교류 유연 검토’ 원칙 표명  
북한, 외세 배격과 민족 대단결 강조하며 남한 정부의 대북전환을 노골적으로 요구
- 6.12 북한, 남한 정부를 향해 6·15공동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
- 6.13 군,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비행체가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 정찰하고 사진 촬영하였다고 발표  
경기도 최전방 지역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병사 1명 귀순, 군과 정보당국 등 유관기관은 귀순한 북한군을 상대로 합동신문에 착수
- 6.15 북한, 6·15 공동선언 17주년 맞아 남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전환 압박  
대통령, 6·15 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북핵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하며 북핵문제 해법으로 9·19 공동성명 거론
- 6.23 합참, 강원도 지역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10일 만에 군사분계선(MDL) 넘어 귀순했다고 발표
- 6.24 북한 주도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 10년 만에 방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를 통해 남한 정부에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 상호 비방·중상 무조건 중단, 남북 군사적 충돌 위험 우선 해소, 남북대화에 북핵문제 배제, 대북제재 철회, 보수정권의 대북정책 청산, 중국식당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 민족대회합 개최 등 촉구
- 6.28 북한, 최고수뇌부를 노린 테러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연합성명’ 발표
- 6.29 북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핵문제는 북미 간 사안이며 남북관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
- 7.4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성공 발표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규정하며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것 촉구
- 7.5 청와대,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성명만으로만 대응할 상황 아니며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 지시  
정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 대북정책 기조 유지 표명  
 정부, 북한에 체육활동을 통한 화해·협력 분위기 유지를 위해 평창 올림픽 참여 제안
- 7.7 정부, '신한반도평화비전'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 촉구  
 7.17 정부, 북한에 '적대행위 중지'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의  
 7.18 국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 7.20 북한, 남한이 대결기도 드러내며 관계 개선 운운한다고 비난하며 정부의 회담 제안 무시  
 7.21 정부,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북한에 다시 한 번 촉구  
 7.22 북한, 국회의 화성-14형 규탄 결의안 채택 비난  
 7.27 북한, 전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의 14기 추모식 금강산 개최하도록 협조해달라는 현대아산 요청에 거부 입장 통보  
 7.29 청와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성주 기지에 추가 배치 지시
- 8.7 북한,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 사실 비난  
 정부,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전면 배격 성명에 대해 '정부 성명'을 통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 촉구
- 8.8 북한, 서해 서북도서에서 진행된 남한의 해상사격훈련 비난  
 8.11 합참, 북한주민 20대 남성 1명이 새벽에 서해 교동도로 넘어와 귀순한 사실 발표
- 8.21 정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  
 8.28 청와대, 북한이 선 넘는 도발이나 수도권 공격 시 즉각 공세적 작전 추진할 것 지시
- 8.29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증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정상각도로 발사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발표하고 이를 강력 규탄
- 9.4 정부, 신베를린구상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9.5 북한, 화성-12형 발사에 대한 남한 정부의 규탄 성명 발표 비난  
 9.23 정부, 북한이 기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길로 나와야 할 것 재차 촉구
- 10.4 정부, 10·4 정상선언 발표 10주년 맞아 북한에 남북합의 존중과 평화 진전의 길로 나올 것 촉구  
 10.6 정부, 북한 선전매체가 개성공단 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주장을 펼친 데 대해 개성공단 내 우리의 재산권 침해 및 불법행위 즉각 중단 촉구

- 10.12 북한, 재입북 탈북민을 대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에 등장시켜 남한사회 비난
- 10.16 북한, 남한 정부의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은 양립될 수 없다며 비난
- 10.22 북한, 남한의 대북정책 비난 및 대북정책 전환 촉구
- 10.26 정부, 북측에 우리 기업의 방북 승인 신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신변안전 보장 및 통행 관련 조치 취해줄 것 요청
- 11.6 정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
- 11.9 북한,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발표에 대해 비난하며 강력 규탄
- 11.10 북한, 개성공단 무단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 조치에 대한 정부 요청 맹비난
- 11.18 북한,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불순한 정책으로 남북 간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킨다며 비난
- 11.22 정부,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를 추격하던 중 발생한 총격 사건 및 북한군이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
- 11.24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7주년 기념행사 열고 당시 전투가 승리였다고 주장
- 11.26 군, 대북 확성기로 최전방 북한군에 ‘JSA 귀순’ 소식 전파
- 11.29 북한, 평남 평성서 동해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 정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발표하여 이를 강력 규탄
- 12.7 북한,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대해 ‘동족 대결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실현되기 어렵다고 비난
- 12.9 정부,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 및 북한 인사 12명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
- 12.21 군, 경기도 증서부전선으로 북한군 초급병사 1명 귀순 후 북한군 수색 및 추격조를 향해 경고사격
- 12.23 정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환영 및 지지
- 12.31 북한,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환영에 대해 제재·압박에 대한 추종은 자멸이라며 비난

## 북한정세 일지

- 1.1 김정은, 1월 1일 새해 신년사 발표 및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 1.2 박봉주 내각 총리, 2.8직동청년탄광 현지 시찰
- 1.5 김정은, 평양 가방공장 방문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 시찰  
'김정은 신년사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 1.8 김정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과 노동자 합숙소 방문
- 1.9 당·국가경제기관·무력부문 일꾼 연석회의 개최
- 1.10 김정은, 재일 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해 연회 마련  
최룡해, 특사 자격으로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12 김정은, 류경김치공장 방문
- 1.14 박봉주, 황해제철 연합기업소·적십자 종합병원 현지 요해
- 1.15 김정은, 새로 건설된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 방문  
박봉주,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등 현지 시찰
- 1.19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233군부대 직속 군부대 시찰
- 1.21 박봉주,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현지 시찰  
최룡해, 태권도 전당 개건·보수 정형 현지 요해
- 1.22 김정은, 오중흡7연대 칭호 수여받은 제1314군부대 시찰
- 1.23 김정은, 故 강기섭 민용항공총국 총국장 빈소 조의 방문  
최룡해, 태권도전당 개건보수 현장 시찰
- 1.26 김정은, 여명거리 건설장 방문  
「외무성」 대변인 담화,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 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라고 '올해 대외정책' 표명
- 1.28 김정은, 탱크장갑 보병연대 겨울철 도하공격 전술연습 지도  
최룡해, 여명거리 건설현장 방문  
박봉주, 순천 시멘트 연합기업소 현지 시찰
- 1.30 박봉주, 평안남도·남포직할시 지역 등 현지 시찰
- 2.2 김정은,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교 방문
- 2.6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 보호부문 일꾼회의 진행
- 2.7 김정은, 강동정밀기계공장 방문
- 2.13 김정은, 증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시험발사 준비 지휘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
- 2.15 김정은, 김정일 생일 75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

- 2.17 김정은, 김정일 생일 75주년 경축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학술집단, 고구려 소금생산 유적 발굴·고  
증 보도
- 2.18 박봉주, 여명거리 건설장과 사리원 탄광 방문
- 2.19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이란 방문 및 이란 국회의장과 양자  
회담 개최
- 2.20 박봉주, 여명거리 건설현장 현지 시찰
- 2.21 김정은, 삼천메기공장 방문
- 2.22 제32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  
북한, 올해 전민 '총돌격전' 등 증산 독려
- 2.23 김정은, 공훈국가합창단 창립 70주년 기념공연 관람
- 2.25 박봉주, 함흥시 중요 기업소들 점검
- 2.26 박봉주, 중요 기업소들 생산실태 등 점검
- 2.28 리길성 외무성 부상, 방중  
리동일 前 유엔 차석대사를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말레이시  
아 방문 및 김정남 시신 인도 요구
- 3.1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966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북한, '근역강산 맹호기상도'를 반영한 새 우표 발행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담  
화, 「일본의 군국주의적·제국주의적 체질 불변 현실」 비난 및 「과거  
범죄에 대한 인정·반성과 철저한 배상」 촉구
- 3.3 김정은, 만경대 혁명학원 방문 및 식수
- 3.4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힘의 균형  
을 이룩하겠다”고 주장
- 3.6 강철 북한 대사, 말레이시아에서 추방  
「외무성」, 주북 말레이시아 대사 추방 결정
- 3.7 김정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훈련  
현지지도  
농업성 식물보호화학연구소, '식물성농약 국산화 실현, 95% 이상 구  
제효과' 선전  
「외무성」, 주북 말레이시아 공민들의 출국 불허  
'강원도 정신'에 호응하는 군중대회 진행  
(평양시·평안남도·평안북도·황해도·남포시에서 7일, 9일 각각 진행)
- 3.8 '국제 부녀절' 107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3.11 김정은, 백두산건축연구원 현지지도  
박봉주, 남흥 청년화학 연합기업소·천리마 제강 연합기업소 현지  
시찰
- 3.13 북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 거론, '초강경 대응조치' 등 위협

- 3.14 '만리마 선구자대회' 관련 근로단체 쫓기모임, 청년중앙회관과 여성회관에서 진행
- 3.15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 평양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문위원 만남
- 3.16 김정은, 여명거리 건설장 현지지도  
제14차 2·16과학기술상 수여식 진행
- 3.17 북한, 민족고전 『증보문헌비고』 및 김정일 전집 출판
- 3.18 최룡해, 금성 트랙터 공장 현지 시찰
- 3.19 김정은, 신형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실험 참관
- 3.20 박봉주, 평안남도 및 평양직할시 지역 공장 및 기업소 현지 시찰
- 3.21 북한, '사회주의 교양 강화'의 중요성 강조  
북한, '세금제도 철폐 43주년' 등 계기 체제 선전
- 3.24 북한, 전국 각지 학원·애육원에 민들레 학습장 공급 선전  
북한 여맹일군·여맹원들, '누에고치 증산' 위한 쫓기모임 진행  
2018년 인구 일제조사 예고 및 국가인구 일제조사위원회 조직, 활동 개시
- 3.26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한미 군 당국의 특수작전 훈련에 대응해 '우리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을 시행할 것이라 주장
- 3.28 김정은,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 현지지도  
평양시 안의 축산단위들, 수의 방역사업에 힘 집중
- 3.29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실시 발표 및 김정은의 '후대사랑' 선전  
김일성종합대학에 산림과학대학 신설
- 3.30 북한 농근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개최  
김정은 '병진노선' 4주년, 북한 '정부 비망록' 발표  
북-말레이시아, '김정남 피살 사건' 관련 공동성명 발표
- 4.1 김정은, 조선인민군 탱크병 경기대회 2017 참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실시 보도
- 4.3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5주년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 진행  
제32차 전국 과학기술축전 개막  
김일성 생일(4.15)과 인민군 창건일(4.25) 관련 '충돌격전' 선동
- 4.6 「외무성」 비망록, 現 한반도 정세와 관련, '미국 책임' 주장 및 '북한 자위적 선택의 정당성·합법성'을 강변하며 비난·위협
- 4.7 김정은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 추대 5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은 집권 5년 업적' 선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9)' 24주년에 즈음한 농업 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 김창협(농근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 협동농장에서 진행

- 4.8 김정은, 평양 버섯공장 시찰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의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4.7) 비난
- 4.9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9)' 24돌 경축 여맹원, 청년학생 무도회 진행
- 4.11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 참석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5주년 경축 중앙 보고대회
- 4.12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만경대 방문
- 4.13 김정은, 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 2017 참관  
김정은, 여명거리 준공식 진행 참석
- 4.14 김정은, 김일성 생일 105주년 경축 중앙 보고대회 참석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됐다”며 ‘위임에 따라 미국의 도발적인 선택을 우리식의 초강경 대응으로 짓부셔 버릴 것’ 위협
- 4.15 김정은,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김영남, 몰도바 대표단과 담화
- 4.16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몰도바 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회담
- 4.17 김정은, 김일성 생일 105돌 기념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여명거리 새집들이 4월 17일 시작 보도  
무역집배 《자력》호 출항식 진행  
김영남,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 담화
- 4.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혁명적 준법 기풍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한 단위들에 모범 준법단위 칭호 수여 등 정령 발표
- 4.21 「외무성」 대변인 담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관련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전쟁에는 핵 타격전으로 주저 없이 맞대응할 것’이라고 위협
- 4.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림법 수정 보충 발표
- 4.23 김정은, 북한군 항공 및 반항공군 태천대지공장 시찰
- 4.24 조선인민군 설립(4.25) 85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4.26 김정은, 인민군 군종 합동 타격시위 참관  
‘황주 중등학교원’ 준공식 진행
- 4.27 2017년 세계 청소년 역도선수권 대회 우승 축하모임,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
- 4.28 최룡해, 청년돌격대 ‘자력자강 성과’ 전시회장 방문
- 5.1 ‘5.1절’ 맞이 기념식 및 경축행사 진행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의 새 대북정책과 칼빈슨호 한반도 재

- 배치 관련 '우리(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위협
- 5.2 기계공업·임업 부문, 4월 인민경제계획 각각 118.3%·190% 초과 수행 성과 선전
- 5.5 김정은, 장재도방어대와 무도 영웅방어대 시찰
- 5.7 김일국 체육상, 시리아 체육총동맹 대표단과 담화
- 5.8 박봉주, 평양 자동화기구 공장 현지 시찰
- 5.9 제17차 '5.21건축축전' 개막식,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 5.10 김정은, 낙랑 영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 시찰  
북한, 가뭄 피해 막기 위한 투쟁 촉구
- 5.12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미 국회 하원 앞으로 항의 서한
- 5.13 김정은,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건제품 및 과학기술성과 전시회장 시찰  
김정은,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기념촬영  
최룡해, 평원군 '원화 협동농장' 현지 시찰
- 5.15 김정은, 화성-12형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조선 자연보호연맹」·뉴질랜드 「미란다 자연기금」 서해안 철새 공동조사 실시
- 5.16 리수용,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 면담
- 5.17 리길성 외무성 부상, 몽골 외무부 차관과 회담
- 5.18 김선경 외무성 유럽2국 국장, 오스트리아 방문 및 담화
- 5.19 각계 인사들의 반향을 통해 화성-12형 시험발사 성공 선전
- 5.20 김정은, 화성-12형 개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북한, 화성-12형 시험발사 성공을 지속 선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맞게 교육의 정보화·현대화 사업 추진
- 5.22 김정은, 북극성-2형 시험발사 참관  
박봉주, 함흥시 중요공장·기업소들 현지 시찰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5.22~25)' 개막
- 5.24 북한,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있다"고 선전
- 5.25 2017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선수·감독 축하모임 진행
- 5.26 최룡해,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 방문, '철강재 생산혁신 대책 강구'  
김선경 외무성 유럽2국 국장, 슬로바키아 외교부 국장과 담화  
강일섭 국가비상재해위원장, 멕시코 주최 재해위험 감소 위한 회의에서 연설
- 5.27 박봉주, 연안군·속천군·문덕군의 농사실태 현지 시찰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 일본의 반론문 제출 비난  
「외무성」 부상 박명국 담화, 미국과 일부 동맹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 화성-12형·북극성-2형 시험발사 성공 추가제재 논의·규탄 성명 발표에 대해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강조
- 5.28 김정은,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 5.29 북한, 최근 화성-12형·북극성-2형 발사 성공 자축 「외무성」 대변인 담화, 일본 당국자들(아베 총리·관방장관)의 '북한 핵무력 강화 관련 대북압력, 제재분위기 고취'는 '군국화를 본격 실현 위한 법적 명분 마련'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핵무기들과 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 것' 강조
- 5.30 김정은,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시험발사 참관
- 6.1 최희철 외무성 부상, 북한 주재 이란 대사와 담화 박봉주 내각 총리, 평남 숙천군·문덕군 농사실태 요해 및 농업 근로자들 고무, '과학적 영농' 강조
- '국제 아동절(6.1)'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 룡라 인민유원지에서 진행
- 「조선아시아태평양화위위원회」 대변인 담화, 美 핵 항공모함 칼빈슨·로널드 레이건호 합동훈련(5.31) 등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 비난 및 '자위적 국방정책 관철 결사전은 계속될 것' 강조
- 6.3 김선경 외무성 유럽2국 국장, 핀란드 유럽평화연구소 이사장 면담
- 김정은, 강서약수공장 시찰
- '보천보 전투 승리(37.6.4)' 80주년 중앙 보고대회, 양강도 예술극장에서 개최
- 6.5 박봉주, 양강도 혜산 김일성 부자 동상 참배
- 김정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
- 6.7 김정은,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석 및 연설
- 6.8 북한 내각 간부, 영국 대사관 방문해 테러 피해에 조의
- 김정은,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 북한 문학예술출판사, 김정일(총서 『불멸의 향도』, 소설 『영원한 녀』) 및 김정은(단편소설집 『려명』) 찬양 도서 등 출판
- 6.9 김정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 6.10 전국 청년학생들 맹세모임 진행
- 6.11 김정은, 초·중등학교원 건설과 원아들을 도와준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 6.13 '전국 학원 원아들의 체육경기' 개막
- 6.14 박봉주, 김책 제철연합기업소·청진 제강소 점검 및 근로자들 고무
- 6.15 김정일 당 사업 개시(64.6.19) 53주년 경축모임, 평양에서 진행
- 6.16 최룡해, 삼지연군 꾸리기 사업 현지 요해 및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방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모범 준법단위' 칭호 수여 등 정령 발표

- 「외무성」 보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경제·보건·인도주의 분야 등 대북제재」 관련 비난 및 위협
- 6.17 박봉주,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 및 강원도 어구 종합공장 건설장 등 점검
- 6.18 「장애자의 날」 기념모임,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
- 6.20 김정은,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공장 현지지도
- 6.21 최룡해, 강원도의 여러 단위 시찰
- 6.22 평양 「국제 건강 및 가정용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 개막
- 6.24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북도 황주군 가뭄피해 실태 현지 점검
- 6.25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
- 6.28 「조선 우주협회」 제3차 위원회,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 대변인 증통 기자 문답,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 성명 채택」(북한 제재, 최고수준 유지)에 대해 비난
- 6.30 김정은, 여명거리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
- 7.1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유엔군 사령부」 서울 이전 60주년(7.1) 관련 비난 및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장
- 7.3 박봉주, 평남 온천군·증산군 가뭄피해 방지 및 농작물 관리 성과 점검
- 7.4 림성심 선수, 「2017년 후허하오터 그랑프리 유도경기 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선전
- 김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단행 명령 하달
- 7.5 김정은, 화성-14형 시험발사 현지지도
- 화성-14형 발사 성공 선전을 통해 주민 자부심 고취 및 김정은 지도력 칭송, 「최후 승리를 향한 돌격전」 독려
- 김일성 사망 23주년 관련 결의모임 등 진행
- 7.6 북한,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연환대회 진행
- 7.7 「외무성」 대변인 담화, 화성-14형 시험발사 관련 미국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대해 위협
- 7.8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남포시 「소금생산 유적」 등 7개의 대상을 역사유적으로 등록
- 7.10 김정은,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기념 음악 무용 종합공연 관람
- 7.11 김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축하 연회 참석
- 7.13 김정은,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 김정은,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만수대의사당) 참석 및 축하연설

- 7.14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 「미국 8군사령부 평택 기지 이전」 비난 및 “1차적 타격목표인 주한 미군기지는 섬멸적 화력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위협
- 7.16 박봉주, ‘승리 자동차 연합기업소’ 현지 시찰
- 7.17 김정은, 여명거리 및 세포축산기지 건설지원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김정은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 5주년 맞아 ‘병진노선 제시, 핵실험, 미사일 실험’ 등을 5년간의 업적으로 칭송
- 7.18 「외무성」 대변인 증통 기자 문답, 「미국의 사죄 및 외교행낭 반환 사실」 주장
- 7.19 「제15차 전국 발명 및 새 기술 전람회」 개막(~7.28)
- 7.24 박봉주, 김덕광업 연합기업소 현지 점검
- 7.26 정전협정 체결(7.27) 64주년 중앙 보고대회 개최  
과학기술을 통한 ‘국산화’ 강조 및 성과 선전
- 7.28 김정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방문
- 7.29 김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현지지도
- 7.30 「외무성」 대변인 담화,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관련 대미 위협  
북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관련 주민 대상 선전·선동
- 7.31 김정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 경축 연회 참석
- 8.2 ‘전국 지진 및 화산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진행
- 8.3 「외무성」 대변인 증통 기자 문답, 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법안’ 서명 및 법안 정식 발효에 대해 비난
- 8.4 전력공업성, 국가통합 전력관리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외무성」 대변인 증통 기자 문답, 미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해 비난
- 8.7 박봉주, 평안북도의 여러 부문사업 현지 시찰  
북한 정부성명,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 배경 발표  
리용호 외무상,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참석
- 8.8 김정은, 모범 강연강사들에게 ‘감사’ 전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특대형 테러범죄’라고 비난하며, ‘전면 배격’ 등 위협
- 8.9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미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발언 비난 및 ‘선제타격’ 등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며 위협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성명, 미 괌 기지의 ‘핵전략 폭격기 한반도 출동’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비난 및 ‘괌 포위사격 방안’을 거론하며 위협  
북한 정부성명(8.7) 지지 평양시 군중집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 8.10 김락겸 인민군 전략군 사령관, “화성-12형 4발 동시발사로 진행하는 꾀도 포위사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 8.11 북한, 미국과의 “판가리 결전은 시작되었다”며 ‘전민 총 결사전’ 선동
- 8.12 최룡해, ‘안주시 상서 협동농장 청년 분조’ 현지 시찰
- 8.15 김정은, 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시찰
- 8.16 최룡해, ‘평양 자동화기구공장’ 현지 시찰
- 8.19 고려 15대 왕의 무덤 새로 발굴
- 8.21 ‘태권도 전당’ 준공식 진행
- 8.22 박봉주, ‘삼지연군 꾸리기 전투장’ 시찰
- 8.23 김정은,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현지지도
- 8.24 「북침 핵전쟁 연습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 미군 주요 인사들의 방한 관련 ‘초강경 조치 대응’ 강조
- 8.25 ‘선군절(8.25)’ 57주년 관련 “선군혁명 위업이 김정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선전
- 8.26 김정은, 섬 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타격 경기대회 지도
- 8.28 청년절(8.28) 9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
- 8.30 김정은, 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지도  
「조선 공산주의 청년동맹」 창립(27.8.28) 90주년, 전국 청년 과학 기술 성과전시회 개최
- 8.31 「외무성」 대변인 증통 기자 문답, 화성-12형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대해 비난
- 9.2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4차 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 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장준상 보건상, 몰디브 WHO 지역총회 참석차 평양 출발
- 9.3 김정은, 핵무기 병기화사업 지도  
「핵무기 연구소 성명(9.3)」 ‘북부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며 6차 핵실험 공식 발표
- 9.4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행  
‘경흥관 창립 3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박봉주, ‘대안 중기계 연합기업소’ 시찰  
김책공대 학부장, ‘핵무기의 EMP(전자기파) 위력 소개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차 평양 출발
- 9.5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단장, 국토환경보호성 대표단과 함께 ‘환경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장관급 서밋’ 참석
- 9.7 조선신보, 『일제의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규명 문헌자료집』 발간 보도

- 9.10 김정은, 핵과학자·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진행  
김정은, 대륙간탄도로켓 장작용 수소탄 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기념촬영
- 9.11 핵실험 참여 핵과학자 기술자 평양 방문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2017' 개막식 진행
- 9.12 김정은, 섬 분교와 최전연지대·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고 기념사진 촬영  
박봉주, 순천 시멘트연합기업소 현지 점검 및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 건설장 방문
- 9.16 김정은, 화성-12형 미사일 발사훈련 참관
- 9.17 '제20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 9.18 박봉주, 함흥시 주요 기업소들 현지 시찰  
북한, "지금이야말로 100% 자급자족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
- 9.21 김정은, 황해남도 과일군 현지지도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 발표
- 9.22 김정은 성명 관련 당·정·군 지지 집회 및 성명 발표
- 9.2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집회 진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성·중앙기관 집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9.24 북한 내각, 제10차 아시아 교예체조 선수권대회 우승한 선수들을 위한 연회 마련
- 9.25 제36차 윤이상 음악회 진행
- 9.26 박봉주, 세포지구 축산기지 시찰
- 9.27 오룡철, 제13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9.25~28)가 나라들 사이의 다방면적인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했다고 언급
- 9.30 김정은,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현지지도  
최룡해, 평양 체육기자재공장 현지 시찰
- 10.3 조선노동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 10.7 당 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 10.12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설립 70주년 기념 보고대회,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 10.13 김정은, 만경대혁명학원 설립 70주년 축하 방문
- 10.14 박봉주,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현지 시찰
- 10.19 김정은, '류원신발공장' 시찰
- 10.22 박봉주, 북창 화력발전 연합기업소 등 현지 시찰
- 10.25 제6차 전국 법무일군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10.26 김정은, 시진핑에게 연임 관련 축전  
 10.28 북한, 세포지구 축산기지 준공식 진행  
 10.29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평양화장품공장 현지지도  
 2017년 가을철 마라톤 애호가 경기대회 진행  
 11.4 김정은, '3월16일공장' 현지지도 및 현대화 과업 제시  
 김영남,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방문  
 11.7 북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청년동맹' 중앙위 전원회의 진행, 1비서로 박철민 선출  
 11.9 「농근맹」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11.12 박봉주, '탄소하나화학공업' 건설 현장 방문  
 11.14 「여맹」 중앙위 제6기 제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11.15 김정은, 금성트랙터 공장 공개 활동  
 11.18 송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최룡해와 담화 및 리수용과 회담  
 11.20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11.21 김정은,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시찰  
 11.22 「외무성」 대변인 증통 기자 문답,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비난  
 11.23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철회  
 요구  
 11.25 리용호 외무상, 라울 카스트로 의장 접견  
 11.28 김정은, 새로 건설된 순천메기공장 현지지도  
 김정은, 화성-15형 발사 친필명령  
 「외무성」 미국연구소 조철수 공보실장 담화, 올림픽기간 도발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17'  
 개최(~12.1)  
 11.29 김정은, 화성-15형 발사 현지지도  
 북한 정부 성명, 사실상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  
 12.1 북한, '국가핵무력 완성' 자축 군민연환대회 진행  
 12.2 「외무성」,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비난  
 12.3 김정은, '압록강타이어공장' 시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  
 련 비난  
 12.5 북한, 러시아와 '자유박탈형 판결 받은 자 인도에 관한 조약' 체결  
 12.9 김정은, 백두산 방문 및 삼지연군 현지지도  
 12.12 제8차 군수공업대회 개막  
 12.18 김정은, 김정일 6주기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평양시에 강남경제개발구 설  
 립 결정  
 12.22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참석

- 12.25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안보리 새 제재결의 “단호 배격”  
평안남도 은산군 새 체육관 준공식 진행
- 12.28 북한, 당·국가·경제·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 개최
- 12.29 김정은, 당 세포위원장들과 공훈국가합창단·모란봉악단 공연 관람

### 동북아정세 일지

- 1.1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마감 단계 발표
- 1.3 한중일·아세안, 독자 통화스와프 960억 달러로 확대
- 1.4 한국 야당 의원단-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 회동  
외교부, 추귀홍(邱國弘) 중국대사 초치·사드 관련 입장 전달
- 1.6 제5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개최
- 1.8~11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방미
- 1.9 주한 일본대사·부산총영사,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로 일시 귀국
- 1.11 중국, 『아태안전협력백서』 발간
- 1.12~13 일본 방위상, 괌 미군기지 방문
- 1.12~16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베트남 순방
- 1.12 제6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상 개최
- 1.13 제1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 1.14 중국, 전략 핵잠수함(SSBN) 남중국해 배치
- 1.17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독도 소녀상 설치 움직임에 항의
- 1.1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바이든(Joe Biden) 미국 부통령 회담 개최
- 1.19 미국, 대북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 1.20~22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실시
- 1.23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 1.25 제10차 한중일 외교부 중남미국장회의 개최
- 1.31 외교부, 일본 학습지도요령 독도 영유권 명기 철회 요구
- 2.2~4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 방한·방일
- 2.6 중국,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입장 표명
- 2.7 미국 하원, 대북규탄 결의안 발의  
미국, 북한 여행경보 갱신
- 2.10 미·일 정상회담 개최
- 2.12 북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 발사
- 2.13 중국, 센카쿠 열도 미일안보조약 적용에 우려 표명

- 2.15 중국, 북한 접경지대 병력 1천 명 증파
- 2.16 한·미 외교장관 및 미·러 국방장관 회담 개최
- 2.17 중·일 외무장관 회담 개최
- 2.18 한·중, 한·러 외교장관 회담 개최
- 2.19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계획 발표
- 2.20 미·일 정상회담 개최
- 2.23 러시아, 사단 규모 군대 쿠릴열도 배치 계획 발표
- 2.27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  
한국, 사드 배치 부지 확정
- 2.28 일본 국가안보국장·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회담 개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회담 개최  
중·러 외교차관급 회담 개최  
미국, 한국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확정
- 3.1~4.30 한·미 연합훈련 '독수리연습' 실시
- 3.6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 3.7 미국, 북한 여행경보 갱신  
한국, 사드 배치작업 시작  
중국 외교부·러시아 의회, 한국 사드 배치 반대 입장 표명
- 3.8 일본 국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 3.9 한·미 통상장관 회담
- 3.13~24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 연습 실시
- 3.15~19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한·중·일 순방
- 3.18 북한, 신형 고출력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 3.21 북·러,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확대 협력 의정서 체결
- 3.22 미국 의회, 대북제재 강화법안(H.R.1644) 발의
- 3.26 미국,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위반 러시아·북한 제재
- 3.27~29 미·일 해군, 연합 해상훈련 실시
- 3.28 러시아, 한국 사드 배치·한미 연합훈련 비난
- 3.30 중국 국방부, 한국 사드 배치 반대 입장 표명
- 3.31 외교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확정에 항의
- 4.1 미국 재무부, 북한 기업·개인 대북제재 대상 추가
- 4.3~5 한·미·일 해군 대잠수함전 연합 훈련 실시
- 4.4 미국 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ICBM 규탄 결의안(H.Res.92) 의결
- 4.5 북한, '스커드-ER'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시도 실패
- 4.6~7 미·중 정상회담 개최
- 4.10 북한, 미국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비난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 개최

- 4.10~21 한·미 연합훈련 '퍼시픽 리치 작전' 실시  
4.12 북한, 한국 사드 배치 비난  
미·러 외무장관 회담 개최
- 4.16~18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 방한  
4.18 미·일 경제대화 개최  
4.22 중·러 외무장관 회담 개최  
4.25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개최  
4.26 한·미 연합훈련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 실시  
주한 미군, 사드장비 성주골프장 배치
- 4.27~28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방러  
4.28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4.29 북한, 북극성-2형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4.30 중·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5.3 러시아,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거부  
5.5 미국 하원, 대북제재법(H.R.1644) 통과  
5.7~10 미·일 해군 연합훈련 실시  
5.10 문재인 한국 대통령 취임  
5.11 일본 외무상, 한국정부에 한일합의 준수·대북압력 강화 요구  
5.14 북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발사  
중·러 정상회담 개최
- 5.14~15 북한 대외경제상, 중국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5.18 일본 외무성, 한국 독도 주변 해양조사 항의  
5.21 북한, 중증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시험발사  
5.22 중·러, 한국 사드 배치 반대  
5.23 북한 외무성, 유엔 안보리 성명 비난  
5.25 트럼프 미국 대통령, 4대 대북정책 기조 공개  
미국 해군, '항행의 자유(FONOP)' 작전 실시  
5.26 중·러 외교장관 회담 개최  
5.28 북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2척 합동훈련 비난  
5.29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낙하
- 6.1 미국 상원, 미사일 방어 체제(MD) 강화 법안(S.1196) 발의  
미국, 대북 독자제재 추가 발표  
6.3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6.3~4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 개최  
6.3~9 미국 항공모함·일본 호위함, 동해 공동훈련 실시  
6.4 북한, 미국·유엔 대북제재 결의 규탄  
한국·필리핀 국방장관 회담 개최  
6.8 북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6.10 북한, 한국 사드 배치 비난

- 6.12 한·미 해군, 괌 근해에서 잠수함훈련(Silent Shark) 실시
- 6.13 북한 무인기 추정 비행체, 성주 사드 부지 정찰 확인  
일본 관방장관, 한국에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 6.14 한·미 외교차관 회담 개최
- 6.15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부인
- 6.15~16 한국 해군, 독도방어훈련 실시
- 6.16~18 제2차 아시안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개최
- 6.20 한·미 공군 연합훈련 실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 대북제재 실효성 의문 제기
- 6.21 미국 재무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개인·단체 제재  
일본, 독도 영유권·한국 불법점거 주장 교과서지침 명기  
미국 국무부, 중국에 대북제재 강화 공식 요구  
미·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 6.22 북한 노동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신병자' 지칭
- 6.23 미국 국무부, 군사훈련 중단 북한 주장 일축·비핵화 요구  
일본 외무성,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공식 사과 요구에 항의
- 6.26 주한미군, 대북 정밀타격용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 한국 배치
- 6.28 미국 국무부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 중국 최하 등급 분류
- 6.28~7.2 문재인 대통령 방미
- 6.30 미국 국무부, 대만 무기판매 승인  
미국 재무부, 중국 단둥은행 대(對)미국 거래 중단조치
- 7.1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착수 공식화
- 7.2 미국 해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 7.4 중·러 정상회담 개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표명
- 7.4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 7.5 킬러스 미국 국무장관, 북한 핵무장 절대 불용 주장  
한·미,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실시
- 7.6 한·중 정상회담 개최
- 7.7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 7.7~8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 7.8 미·중 정상회담 개최  
미·러 정상회담 개최  
중·일 정상회담 개최  
일·러 정상회담 개최
- 7.10 러시아, 북한 화성-14형 중거리미사일 주장 자료 유엔 제출
- 7.10~17 미국·일본·인도 연합 해상훈련 실시
- 7.11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
- 7.12 중국,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미국 중앙정보국(CIA), 러시아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주장

- 7.13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개시 공식 요구  
러시아 외무장관, 트럼프 주니어-러시아 인사 내통 주장 반박
- 7.17 미국, 대북불법거래 중국기업 수사 착수
- 7.19 정부,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적십자회담 제의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개최
- 7.22 미국, 미국 시민 북한 여행 전면금지
- 7.24 중·러 해군, 연합훈련 ‘해상연합-2017’ 실시
- 7.26 중국, 북중 접경 세관단속 강화 미국 요구 거부
- 7.28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 7.29 중국, 한국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결정에 우려 표명  
러시아, 미국 외교관 755명 추방·미국 외교 자산 압류 조치 발표  
미·일 공군 공동훈련 실시
- 7.30 중국, 주중한국대사 초치·사드 임시배치 항의
- 8.1 미국,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 발효
- 8.2 미국,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 발효
- 8.3 고노 타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 한국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 8.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371호 채택  
한·중, 북·중 외교장관 회담 개최
- 8.7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
- 8.7~8 중·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북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 전면배격 입장 발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북·러 외무장관 회담 개최
- 8.8 제50회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개최
- 8.9 북한, 화성-12형 이용 꺾 포위사격 작전방안 검토 발표
- 8.14 북한,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비난  
트럼프 대통령, 중국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행정명령 서명
- 8.15 정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납부에 우려 표명
- 8.17 미국, 대북 대화 3대 조건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동북아  
안정 저해 언행 중단’ 제시  
문재인 대통령, 일본 징용 피해자 개인청구권 언급
- 8.19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 8.21~31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실시
- 8.22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 한국 징용공 문제 완결 주장  
미국 재무부, 북핵 지원 중·러 기업·개인 추가 독자제재 발표
- 8.25 한·러 외교장관 회담 개최  
일본, 북한 관련 중국 기업 추가 제재

- 8.29 북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중국, 한국 사드 배치 중단 요구
- 8.30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 9.1 미국, 미국 내 러시아 외교시설 3곳 폐쇄
- 9.3 북한 6차 핵실험 실시  
중·러 정상회담 개최
- 9.3~5 제9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최
- 9.4 한·미 정상, 한미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
- 9.6~7 문재인 대통령,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한·러 정상회담 개최  
한·미·일 국방당국 북한 핵실험 대응 화상회의 개최  
중국, 주중한국대사 초치·사드 배치 항의
- 9.7 일·러 정상회담 개최  
한국,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완료
- 9.12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회담 개최  
미·일 육군 연례 합동훈련 '동방의 방패-17' 실시
- 9.13 미국 재무부, 중국 유엔제재 불이행 시 달러시스템 배제 경고
- 9.13~26 중·러 해군, 연합훈련 '해상연합-2017' 실시
- 9.17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 개최
- 9.18 중·러 외무장관 회담 개최
- 9.19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 발언  
한·미·일 육군참모총장 회담 개최
- 9.20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회담 개최  
한·중 육군 대표 및 외교장관 회담 개최
- 9.21 한·미 정상회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중·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 9.22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 9.26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 방러
- 9.27~28 한·미 국방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 9.28~10.1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 방중
- 9.3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Tillerson 미국 국무장관 회담 개최
- 10.4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 10.14 중·러 국방부, 한국 사드 철수 요구
- 10.16~20 한·미 해군 연합훈련 실시
- 10.18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 개최  
한·미·일 외무차관 회의 개최
- 10.18~24 중국 19차 당 대회 개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당 총서기 연임
- 10.19 한·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 개최

- 10.20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 개최
- 10.21 한·미, 미·일 공군 연합훈련 실시
- 10.23~24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제4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참석·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개최
- 10.24~25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실시
- 10.28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 10.29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개최
- 10.31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 개최  
한·중 사드 합의 발표  
러시아 정부, 미국 대선 개입 의혹 거부
- 10.31~11.2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방중
- 11.1 제4차 아베 신조 일본 내각 출범
- 11.5~8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방한
- 11.9 일본 정부, 트럼프 방한 환영만찬 위안부 피해자 초대 관련 우려 표명
- 11.8~10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 11.10~1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 11.11 한·중, 중·일 정상회담 개최
- 11.13 아베 신조 일본 총리·리커창 중국 총리 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리커창 중국 총리 회담 개최
- 11.16~26 미·일 해군 합동훈련 실시
- 11.21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 11.22 한·중 외교장관 회담 개최
- 11.24 일·러 외무장관 회담 개최
- 11.27 한·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 개최  
제17차 한·러 정책협의회 개최  
한·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 개최
- 11.28 중국 국가여유국, 베이징·산둥 지역 여행사에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
- 11.28~12.1 이도훈 한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방미
- 11.29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제1차 한·러 북극협의회 개최
- 12.4~8 한·미 공군,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실시
- 12.11~12 한·미·일, 미사일 탐지 경보훈련 실시
- 12.11~15 조셉 윤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 일본·태국 방문
- 12.12 킬러슨 미국 국무장관, '전제조건 없는 대북 대화' 제안
- 12.12~15 한·미 연합훈련 '워리어 스트라이크(Warrior Strike)' 실시
- 12.13~16 문재인 대통령 방중

- 12.19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예방  
미국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발표
- 12.27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 발표 및 피해자 의견 미수렴·한일 간 이면합의 지적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위안부 합의 변경 시 한일관계 관리 불가  
능 주장

### 북한인권 일지

- 1.5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외 최초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발간
- 1.9 러시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대북 사업에 3백만 달러 지원, 중국 50만 달러 지원
- 1.10 리 건설현장서 북 노동자-현지인 패싸움, 북한인 1명 중태
- 1.12 미국, 북한 개인 7명, 기관 2곳 추가 인권제재, 김정은 동생 김여정 포함 김정은 아편재배에 10대 동원, 탈북자 단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증언 제출
- 1.16 정부,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 1.18 납북자 단체, 유엔북인권사무소에 납북자 면담 청원  
정부, 유진벨재단 결핵약 대북지원 승인, 내달 반출 예정
- 1.24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출범
- 1.25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임기종료 직전 대북인도지원 결정
- 1.28 미국 난민심사 강화로 탈북 난민 입국 잠정중단
- 1.30 납북자 단체, 북한 납북자 대상 사상교육 30년 만에 재개
- 1.31 북한, 유엔사무총장에 종업원 집단탈북은 납치 주장 서한 전달
- 2.7 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 정부 탈북노동자 최씨 강제송환 금지 결정  
탈북여성, '18호 수용소' 내 인권유린 실태 첫 고발
- 2.9 북한 아동 노동착취 실태 유엔 실무회의서 논의
- 2.10 미국 구호단체, 북한에 17억 원 상당 의약품 지원
- 2.15 휴먼라이프워치, 유엔에 북한 아동 인권유린 실태 보고서 제출
- 2.17 러시아 건설 현장서 북한 노동자 2명 압사 사고 발생
- 2.22 탈북민 단체, 김정남 암살 계기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김정은 제소 재촉구
- 2.27 윤병세 장관, 제네바서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 촉구
- 3.1 일본,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
- 3.2 커비(Michael Kirby)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김정남 사건 북한과거 형태의 부활 비판

- 3.4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관리소에 8만~12만 명 구금돼 있다고 분석
- 3.5 통일부, 북한고급정보 보상금 4배 인상, 고위급 탈북민 유도 목적 분석
- 3.6 이성호 인권위원장,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북한인권 논의
- 3.7 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북한인권 증진방안 논의
- 3.13 키타나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위원회(HRC)에 북한인권 책임 추궁
- 미국 국무부, 탈북 지원 동남아 단체에 보조금
- 3.17 일·EU, 북한인권 유린 책임 규명 새 유엔 결의안 제출
- 3.20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자문회의 개최
- 3.22 통일부, 북한인권자로 공유를 위해 북한인권포털 개설
- 3.23 법원, 민변이 낸 북한식당 종업원 접견소송 판단 없이 끝냄
- 3.24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결의 채택, 김정남 암살 간접 지적
- 3.28 통일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대북지원정보체계 구축
- 3.30 한·미, 트럼프 집권 후 첫 북한인권협의, 인권정책 조율
- 4.1 한·일 공동 조사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인권 침해 심각
- 4.4 대북제재 모금 난항 속 유엔 260만 달러 지원
- 4.5 1분기 탈북민 작년보다 18% 줄어, 북한통제강화 여파
- 4.8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북한에 여성인권 정보 요청
- 4.11 폴란드 지방정부, 작년 북한 노동자 360명에 노동허가증 발급
- 4.13 하나재단 결핵협회와 MOU, 탈북민 결핵관리 협력
- 4.17 미국 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 미국 민간단체, 올해 처음으로 17억 원 상당 의약품 대북지원
- 4.19 통일부, 가해자 몽타주 등 복인권침해 기록 법무부 이관
- 4.20 법무부, 북한인권 법적 책임자 규명 위해 자문단 출범
- 4.25 정부, 북한주민에 인권침해 사례 전달 위한 북한인권증진계획 수립
- 4.26 프랑스, 사상 첫 WFP 통한 대북 식량지원
- 5.3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방북
- 오바마 대북지원 약속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지급 완료
- 5.9 북·미, 오슬로서 6개월 만에 '1.5 트랙' 대화 재개
- 5.13 미국 상원, 하원(5.10), 북한 정보유입축진법 발의
- 5.16 북한 외무성에 인권담당 대사·조직 존재 유엔문서로 확인
- 5.21 북한, 군인들 장마당 출입 금지령 선포
- 5.24 북한, 국내·국제 전화 가능한 전화기 등장
- 5.25 미국인 북한관광 전면금지법안 하원 발의
- 5.26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한국정부 인도지원단체 대북접촉 승인
- 5.31 유엔, 북한에 남북 어부 등 강제실종 34건 정보 요청
- 6.1 통일부, 6·15남측위원회 대북접촉 승인
- 6.5 정세균 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 8·15 이산상봉 결의안 합의

- 6.7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에 인권특별보고관 협력 촉구
- 6.8 북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송환해야 이산가족 상봉 가능 주장
- 6.9 통일부, 북한 선원 2명 북방한계선(NLL)서 송환
- 6.10 유엔,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
- 6.14 오토 월비어 석방
- 6.16 북한인권법 재승인·정보유입확대법안 미국 하원소위 통과
- 6.19 오토 월비워 사망
- 6.28 미국 국무부, 북한 15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 국가' 지정
- 7.3 미국, 탈북여성매매 방관으로 인해 중국 '최악인신매매국가' 지정
- 7.4 국민의당 최경환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개정안' 발의
- 7.9 북한, 식량사정 악화로 아사자 발생
- 7.12 올해 상반기 탈북민 입국 20% 감소, 탈북자 중 여성비율 85%
- 7.13 미국, 김정은 정권 흔들 영상물 제작 대북송출 방안 추진
- 7.15 유엔인구기금, 대북지원 5개년 계획 마련 1천만 달러 투입예정
- 7.18 하태경 의원, 김정은 집권 이래 탈북 후 재입북 25건이라고 발표
- 7.21 러시아, 북한에 밀가루 5천 200톤 지원
- 7.21 북한, 남한 정부가 제안한 군사분계선상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불응
- 7.24 중국, 유엔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요청에 탈북자는 난민 아니라고 발표
- 7.25 북한, 12년 연속 '국민을 위협 아래 살게 하는 나라' 지목
- 7.27 미국 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에 '미군유해 송환' 추가
- 8.1 북한, 남한 정부가 제안한 적십자회담 불응
- 8.8 신임 한국적십자사회장에 박경서 회장 선임
- 8.9 한국계 임현수 목사 억류 31개월 만에 북한서 석방
- 8.11 카타르, 북한 노동자 고용 승인 중단 발표
- 8.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정책 다룰 탈북민 채용공고(6급) 처음으로 발표
- 8.15 미국, 북한 16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 8.16 북한, 중국에 3만 명 인력파견 추진
- WFP, 내년 대북지원 예산 5천 300만 달러 책정
- 8.23 통일부, 북한과 대화노력 지속·인도지원 추진
- 미국, 북핵 관련 북한·중국·러시아 기관 및 개인 추가 제재
- 8.26 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73건 정보 제공 요청
- 8.28 임지현, 북한선전매체 또 등장, 탈북민 출연방송 비난
- 9.4 정부, 대북 인도지원·북한인구센서스 지원 보류
- 9.6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앞 시위 탈북민, 북한외교관과 몸싸움
- 9.12 인권위, 국가기구로는 이례적으로 유엔에 북한억류자 조사 청원
- 9.13 남북하나재단·인천적십자병원, 탈북민 의료지원 협약

- 9.15 통일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인도협력국' 8년 만에 부활  
 9.18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9.23 리용호, 유엔기구들 만나 대북지원 호소  
 9.26 미국 하원, 정보유입 대폭 강화한 북한인권법안 만장일치 통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미국 하원 본회의 통과  
 9.28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1주년 보고서 출간  
 스리랑카, 북한인 입국규제 강화, 온라인·해외에서 비자신청 금지  
 10.2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와 분리한다고 밝힘  
 10.6 중국, 북한 근로자 '취업비자' 발급도 중단  
 10.11 통일부, 북한 핵실험장 인근 지역 탈북민 대상 연내 피폭검사 실시  
 예정 발표  
 10.25 미국 하원, '오토 워미어' 이름 딴 북한 제재법 통과  
 10.27 미국 재무부, 인권침해로 북한 개인 7명, 기관 3곳 추가 제재  
 10.30 설립 1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 가해자' 245명 혐의 확인  
 11.1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 상정, 외국인 수감자 영사보  
 호 등 촉구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미국 의회에서 북한 실상에  
 대해 증언  
 11.5 중국 선양서 탈북자 10명 공안에 체포, 송환 위기  
 11.6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 북한 결핵 사망자 한 해 동안 두 배  
 로 증가했다고 보고  
 11.8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북한의 이행 여부 심의  
 염수정 추기경, 하나원 방문해 탈북민 격려  
 11.9 트럼프 한국 연설, 북한 도발, 인권침해 구체 사례들며 전임 미국  
 대통령들과 차별  
 11.15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요덕 15호 관리소, 수감시설 대거 철거  
 11.21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11.22 양골라, 대북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 대거 출국  
 11.24 영국 외무부, 북한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ODA) 중단  
 11.28 중국 선양서 체포된 탈북자(11.4) 10명 북한으로 강제 송환  
 12.3 몽골,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갱신 중단 결정  
 12.6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1118)' 통과  
 12.7 중국, 북한 국경 5곳에 난민수용소 건설 계획  
 12.11 토마스 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12.12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에 북한 억류 한국인 조사 요청  
 12.20 유엔총회, 1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12.22 일본인 납북피해자 가족들, 의회에 조속한 문제해결 촉구  
 12.27 통일부, 북한 길주군 풍계리 탈북민 방사선 피폭 검사 결과 발표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마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 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 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 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6-04 KINU 통일 + Vol. 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i>	도경옥 외 24,500원

## 연구보고서

### 2015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차계층변화	홍 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미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선,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 2017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 기 타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